

열린충남

2018
SUMMER Vol.83

권두언

특집 | 작은 도시, 그곳에 사람이 산다

저성장시대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례들

저성장시대의 도시축소 실태

인구감소 도시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인구감소시대, 한계(限界)마을의 다양한 재편 가능성

논단

통합물관리, 소유역중심의 물자치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충남의 섬

서해의 하와이, 가의도(賈誼島)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권영현
편집위원 김양중, 김진영, 오병찬, 유학열
이상준, 정종관, 정지은
에디터 정봉희, 이유나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이메일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승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magazine@humanrights.go.kr로 연락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대한민국을 넘어 한태평양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의 미래와 210만 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우리는 충남연구원 입니다.

2018 SUMMER Vol.83

CONTENTS

04 권두언
축소도시 시대의 정책패러다임 실현해야

06 특집
작은도시, 그곳에 사람이 산다
1. 저성장시대,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례들
2. 저성장시대의 도시축소 실태
3. 인구감소 도시에 대한 맞춤형 정책
4. 인구감소시대, 한계(限界)마을의 다양한 재편 가능성

32 논단
1. 통합물관리, 소유역 중심의 물자치권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46 충남의 섬
서해의 하와이, 가의도(賈誼島)

52 충남마을기행
찬찬히 둘러 보श्य, 서산 회포마을

56 충남 시장 플러스
닷새마다 열리는 무지갯빛 동네! 부여시장

62 열린마당
지역 특화 공예 자원을 활용한 공예마을 조성에 관하여...

66 해외리포트
1. 뉴질랜드 마켓 현황 및 시사점
2. 스페인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사례와 충남의 시사점

92 상생협력
1. 이웃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마을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축 운동을 제안한다
2. 제주지역 갈등과 시민의 참여

102 오피니언
1. 30-50클럽 가입, 선진국 진입할 호기다
2.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106 충남소식

108 연구원소식

111 충남의 사계



권두언

축소도시 시대의 정책패러다임 실현해야

김용웅 도시·지역계획 박사(前 충남연구원장)



도시 성장시대에서 축소도시 시대로

산업화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로 도시는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왔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성장지향적 도시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시 성장의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도시화는 이미 90%를 넘어섰고 오랫동안 도시인구의 충실한 공급원 역할을 해 온 농촌은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공동화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산업 성장과 경제발전도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붕괴되어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이미 성장이 멈추었거나 인구나 경제 그리고 개발수요 차원에서 양적인 규모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큰 ‘축소도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성장지향적 도시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축소도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성장지향적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도시 행정당국과 시민들은 그동안 관행화되어 왔던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잉 도시계획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성장 지향적 도시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도시가 처한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축소도시’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치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 내 빈집 발생, 특정지역의 노후화 쇠퇴가 진행되는 동시에 도시 전체의 인구와 경제 및 개발수요의 양적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럴 우려가 크다면 그 도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축소도시’라 할 수 있다. 저성장시대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잉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추진은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재정 낭비와 비효율, 환경과 경관의 훼손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

‘축소도시’시대의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저성장시대 도시축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채택해온 성장지향적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시의 인구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과잉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을 축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제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한정된 가용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도시정책을 위한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다원화해야 한다.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정책은 도시인구, 산업·경제 및 개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 일변도의 목적추구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도시계획 목적과 가치를 삶의 질 향상, 도시경관과 환경의 쾌적성과 건강성 증진, 문화융성, 과학과 학문의 증진 등으로 다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모든 지역이 인구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우 소기의 성과달성보다는 막대한 국가재원의 낭비와 경제적 비효율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축소도시’ 현상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빈집 발생이나 도시 쇠퇴현상은 저성장 시대에 불가피한 도시축소 현상임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시 혁신 환경을 만드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형 소단위 사업추진에 치중해야 한다. 그동안의 도시개발이 공공주도 대규모사업에 치중했다면 저성장시대의 도시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과 생업에 직결된 소단위 도시공간의 혁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치중해야 한다.

끝으로 저성장시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 관행에 익숙한 도시행정 당국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합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 성장시대 도시발전과 혁신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집

작은 도시, 그곳에 사람이 산다

- FOCUS 01저성장시대,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례들
- FOCUS 02저성장시대의 도시축소 실태
- FOCUS 03인구감소 도시에 대한 맞춤형 정책
- FOCUS 04인구감소시대, 한계(限界)마을의 다양한 재편 가능성

특집 1

저성장시대,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례들

임준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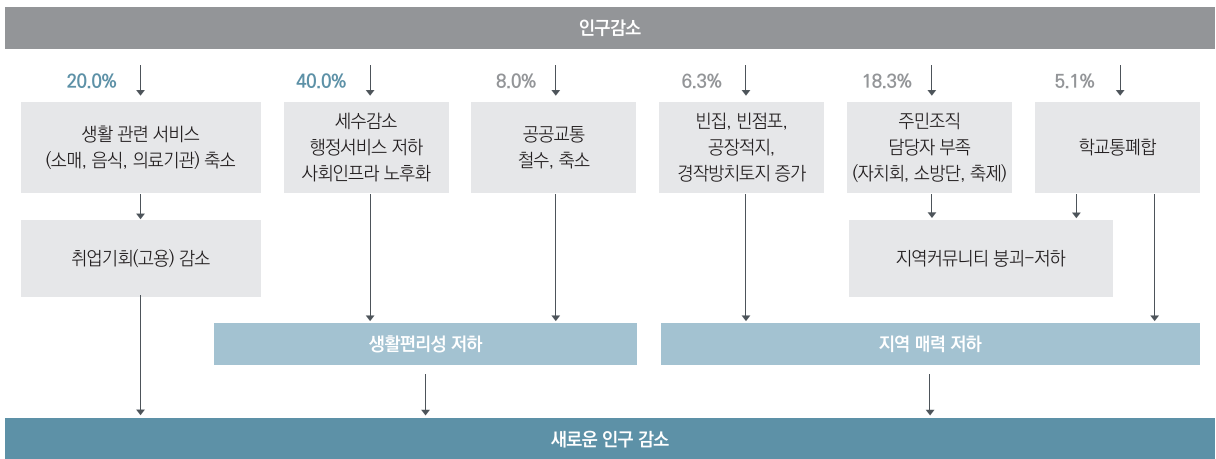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

#1 인구감소, 왜 문제인가?

성장 시대에 ‘인구(사람)’는 지역성장의 원천이었고, 이에 자치단체의 대부분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에 최종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은 거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나 지나친 도시확장 혹은 도시 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과밀과 같은 지역 간 불균형, 과도한 혼잡 등의 여러 도시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도시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협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 1] 인구감소의 문제점



자료 : 일본 国土交通白書 (2015) 참조, / ()는 연구자의 전문가 설문조사(2017) 결과

인구의 지나친 증가와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 못지않게 인구감소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악순환의 굴레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1차적으로 생활편의서비스 수요의 감소, 노동공급의 감소, 세수의 감소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정주시설의 열악화, 양질의 일자리의 부족, 지방재정 적자의 심화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악순환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는 빈집 및 유휴지의 증가, 폐교 발생 등의 도시 정주 환경(urban amenities)의 악화로 지역의 매력이 저하하여, 타 지역 이주에 의한 인구감소가 가속 및 지속된다. 더불어, 성장기에 건설된 공공시설과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인프라 노후화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통근과 통학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대중교통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저성장시대의 인구문제는 인구 총량의 문제보다는 인구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즉, 생산력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2

축소도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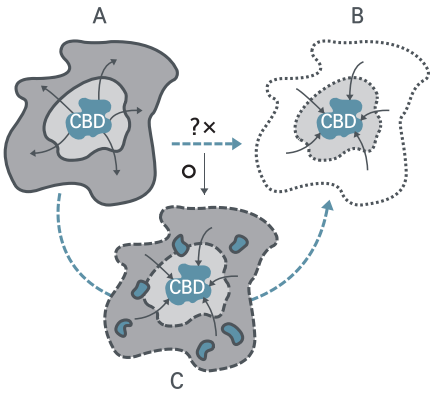
축소도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독일은 1990년대 통일 이후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소도시란 ‘인구가 줄어들면서 과거 성장시대에 건설한 주택과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 상태에 이르게 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축소도시국제네트워크(the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에 의한 보다 조작적 정의에 의하면, 축소都市는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 가운데 이 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연간 0.15%씩 적어도 5년 동안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구조적 위기의 징후를 보이는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도시축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축소·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와 증가’, ‘성장과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공간 전략이 중요하다. 그림과 같이 도시가 성장할 때는 접근성과 지가가 높은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확장하는 모습(A)을 뚜렷이 나타내지만 인구감소시대를 넘어 도시가 축소할 때는 성장의 반대 즉, 콤팩트시티 형태(B)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축소하는 모습이 도시 공간 곳곳에 골다공증 환자의 골 구조 형태로 불규칙(C) 하게 나타난다.

그 모습도 명확히 눈에 띄지 않아 초기에는 정책적 관심을 끌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콤팩트

팩트시티가 인구감소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의 도시공간 전략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콤팩트시티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보완적 공간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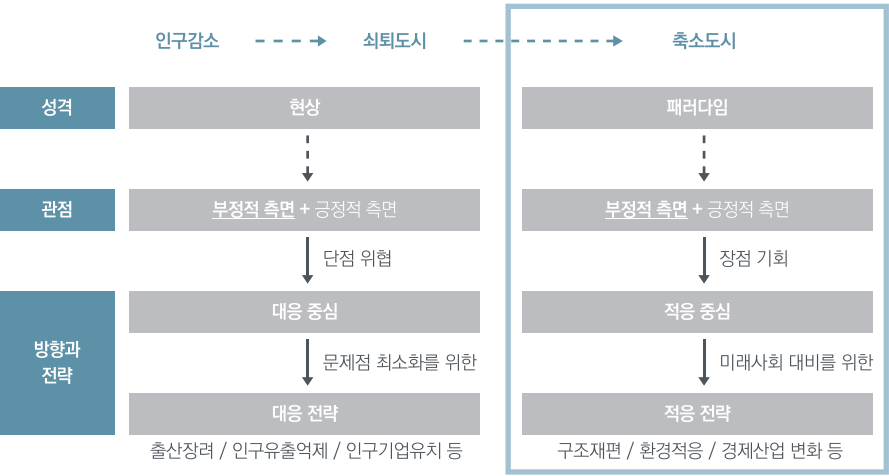
[그림 2] 도시의 성장과 축소 모습



이러한 축소도시의 성격과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감소와 도시쇠퇴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축소都市는 기존의 인구감소와 쇠퇴都市의 부정적 어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는 아니다. 축소都市는 도시 구성요소의 핵심인 사람의 감소가 또 다른 도시 구성요소인 토지와 활동(시설)부분에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도시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로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축소都市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여야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소都市 시대에는 인구증가 대응전략 못지않게 적응전략이 강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구감소가 주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적응전략 개발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축소都市를 보는 관점



1) NIRA, 2008, 地方再生に向けたシナリオ 참조 재정리

#3 축소도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구감소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 보다는 인구감소의 장점과 기회를 찾고 이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은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라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가구소득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이어지면서 실업은 감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가구 소득의 증가되어 안정된 생활로 이어져서,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여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을수록, 남성의 가사·육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 외에 인구감소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기회가 있다.

첫째,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 기회이다. 도시화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까지 도시화와 성장 위주 정책에 따른 교통체증, 부동산가격 상승, 주택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는 환경규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도시는 환경부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이다. 기존 도시자원의 재편, 재이용을 통한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도시규모를 창조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지구의 생명 유지기능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질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4] 축소도시가 주는 기회

축소도시 시대의 기회		
1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 기회이다.	38.3%
2	환경규제 강화, 기후변화에 적합한 도시가 될 수 있다.	18.3%
3	지방재정에도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	17.7%
4	식량주권 및 농업적 측면에도 기회이다.	9.7%
5	생산력 문제 극복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건강한 고령자.	16.0%

※ 위 %값은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임

셋째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식량주권 및 농업적 측면에서도 기회이다. 1인당 경지면적 확장과 더불어 인구감소로 식량소비가 감소하여 식량자급률도 개선될 수 있다.

넷째는 지방재정에도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연간 2조 예산의 자치단체가 1조의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차입한다면, 지금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연간 5,000억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차입 자원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물론 고령자 증가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는 인구감소 사회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적합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다. 산업 자동화, 무인화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고, 실제 고령자의 건강(생산성)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찾아본다.

이에, 인구감소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구조의 문제, 경제활동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실업 청소년의 사회활동 강화로의 사회구조 변화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실제 현재 65세 고령자는 과거 산업화 초기의 4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도시 공간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인구와 GRDP 증가에서 삶의 질(행복)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4 축소도시 기회를 살린 사례

축소도시는 인구감소나 도시쇠퇴와 같은 하나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에 적응하면서, 공간적·환경적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지금의 도시구조를 축소도시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도시 공간구조를 네트워크 콤팩트시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토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이다.²⁾ 토야마시는 인구 약 42만 명, 고령화 비율 31.8%(2014년 기준)의 도시로,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로 인한 도시 전체의 활력저하와 매력 상실,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압축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감소가 심각했던 토야마선을 노면전차화(LRT)하고('06.4월) 버스운행과 연계시켜 대중교통의 활성화, 대중교통 노선에 거주, 상업, 업무, 문화 등 도시기능을 집적 시키고, 도심지 내의 주택 취득 비용과 임대주택의 집세 보조, 핵심기능을 중심부에 두고 각각의 지역에도 생활거점을 두면서 공

2) 주일본한국대사관, 2015. 6, 일본의 Compact City 정책 동향 보고

공교통을 축으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 중심시까지 재생을 위해 제3섹터 사업과 복합시설 운영 등을 위해 ‘(주)마을조성과 마음’이 주요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콤팩트시티를 추진한 도야마시는 도심과 거점 지역을 차세대형 노면전차(LRT)와 버스로 연결해 노선 주변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덕분에 중심 시가지의 인구는 2015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고 지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 당국은 LRT와 버스 노선 주변 거주 인구의 비율을 작년 37%에서 2025년 4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³⁾

도야마시는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체계 구축(LRT)을 기반으로 도심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개발해야 할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적절히 구상·실천하면서 건강한 도시구조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시차원에서 접근한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철강도시인 영스타운의 축소이다. 영스타운은 축소 도시 개념을 적극 반영한 ‘영스타운 2010 비전’을 수립하였다. 비전에서는 1) 영스타운이 더욱 작아진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2) 새로운 경제에 작아진 도시의 규칙을 정의하는 것, 3) 영스타운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4)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3) 연합뉴스, 2017.12.26. 11:35, "일 대도시 50%, 도심에 거주·도시기능 집약 '콤팩트시티' 추진" 참조



[표 1] 영스타운 2010 비전 주요내용

비전	주요내용
영스타운이 더욱 작아진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 사회적, 경제적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합리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필요
새로운 경제에 작아진 도시의 규칙을 정의하는 것	● 철강 산업이 아닌 새로운 영스타운의 지역경제 현실을 고려 ● 대학, 의료, 산업클러스터, 예술공동체 등 도시가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경제 지향 필요
영스타운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깨진 유리창’을 교정하고, 근린지구, 중심상가, 교육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원 필요 ● 공공안전, 인종차별 등의 해결도 함께 고려
실천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 도시에 이미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리더들의 존재를 확인 ● 실천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실행계획에 지역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자료 : Youngstown(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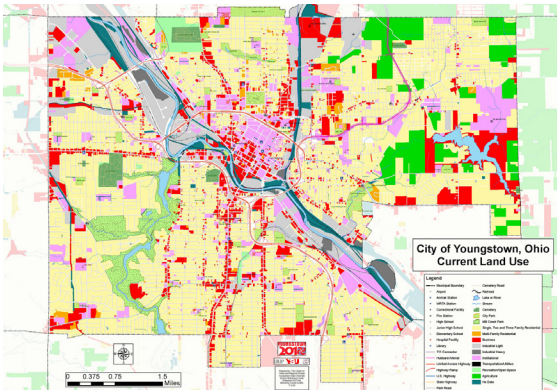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도시를 새로운 규칙에 따른 축소된 규모로 리노베이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착지 등을 계획하지 않는 것, 새로운 공원과 녹지를 만들기 위해 토지관리 제도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기본 보건, 교육, 행정, 문화 분야의 지역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수축을 위한 규칙 중 특별한 관련성은 생태학적 구성요소인데, 도시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장소의 “친환경적(greener)시스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4개 테마와 연결된다.

영스타운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축소도시 관점의 “도시 전환(Urban Convers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보다 실천적이고, 행동집약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고민·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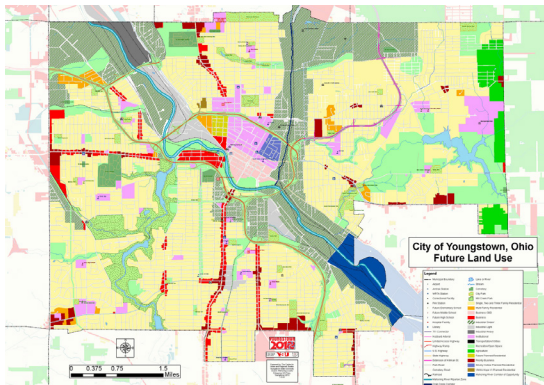
아직 축소도시 성격과 개념을 도시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도시들은 많지 않지만, 축소도시라는 패러다임에 착안한 종합적·전략적 정책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지역주민과 함께 도출한 토지이용계획 주요내용

테마	주요내용	비고
녹색네트워크	• 기존 녹지 유지 → 새로운 위락 공간 창출 • 위락·공원 지역 + 농업지역 신설	친환경적(greener)시스템
경쟁력 있는 공업지구	• 기존 제조업에 의지하던 면적(중공업지역, 경공업지역) 축소 •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공업 입지 유도 • 녹색공업지역 신설	친환경적(greener)시스템
자립가능 근린지역	• 기존 주거지역 30% 축소	-
활기찬 도심	• 기존 상업지역 16% 축소	-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변화 계획

자료 : Youngstown (2005)

#5 그래서 충남은?

충남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나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에 인접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이질성이 매우 크고 지자체별 인구감소의 원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발전에서의 단계 혹은 생애주기에 따른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과정이나 부도심화에 기인하기도 하고, 도내 지역 간 자본의 축적과 이의 공간-시간적 순환, 노동의 지리적 분업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세대 간 상이한 이주행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고유의 여건 및 현황과 더불어 인근 지역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처방과 기회로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에는 전술한 축소도시의 기회를 살려 도시화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공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계획가·정책실천가의 책무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길 외, 2017. 10, 인구감소가 주는 기회 : 축소도시의 이해와 적응전략
임준홍 외, 2017,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충남연구원
윤혜영, 2017. 6, 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 공공교통 친화 도시, 『IDI 도시연구』 제11호
연합뉴스, 2017.12.26. 11:35, “일 대도시 50%, 도심에 거주·도시기능 집약 ‘콤팩트시티’ 추진”
주일한국대사관, 2015. 6, 일본의 Compact City 정책 동향 보고
Youngstown(2005). Youngstown 2010 Plan. http://www.cityofyoungstownoh.com/about_youngstown/youngstown_2010/plan/final_plan/Ytown2010_chapter6.pdf. Accessed April 18, 2017.

* 본 글은 2017년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연구자가 기 발표한 도시정보지 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리·보완·수정 한 것임.

저성장시대의 도시축소 실태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지방소멸, 도시축소와 같은 현상이 도시·지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혹자는 이러한 용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공포심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향후 25년 내 89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회자되면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책이 연이어 발간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지방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현상이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 도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은 향후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저성장 추세와 이로 인해 지방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간략하게나마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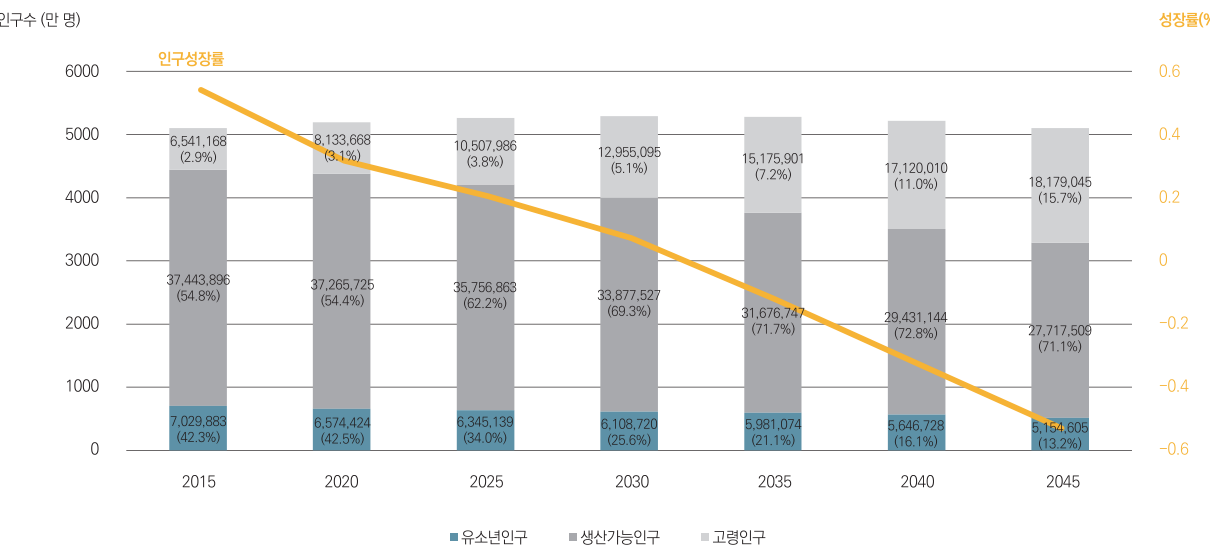
2.1 인구 저성장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2000년에 0.84%, 2017년에 0.39%로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심지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인구성장 중위 가정)에 따르면 2031년에 정점인구에 도달한 이후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1.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5년에 2,7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5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8%(654만 명)를 차지하였으나, 2045년에는 35.6%(1,818만 명)까지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도 2015년 93.1명에서 2045년 352.7명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17년의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10년 전(49만 2,200명)에 비해 27.5%나 줄었다. 같은 해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구조 및 성장률 전망



주 : 그래프 안의 수치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검색일: 2018.4.1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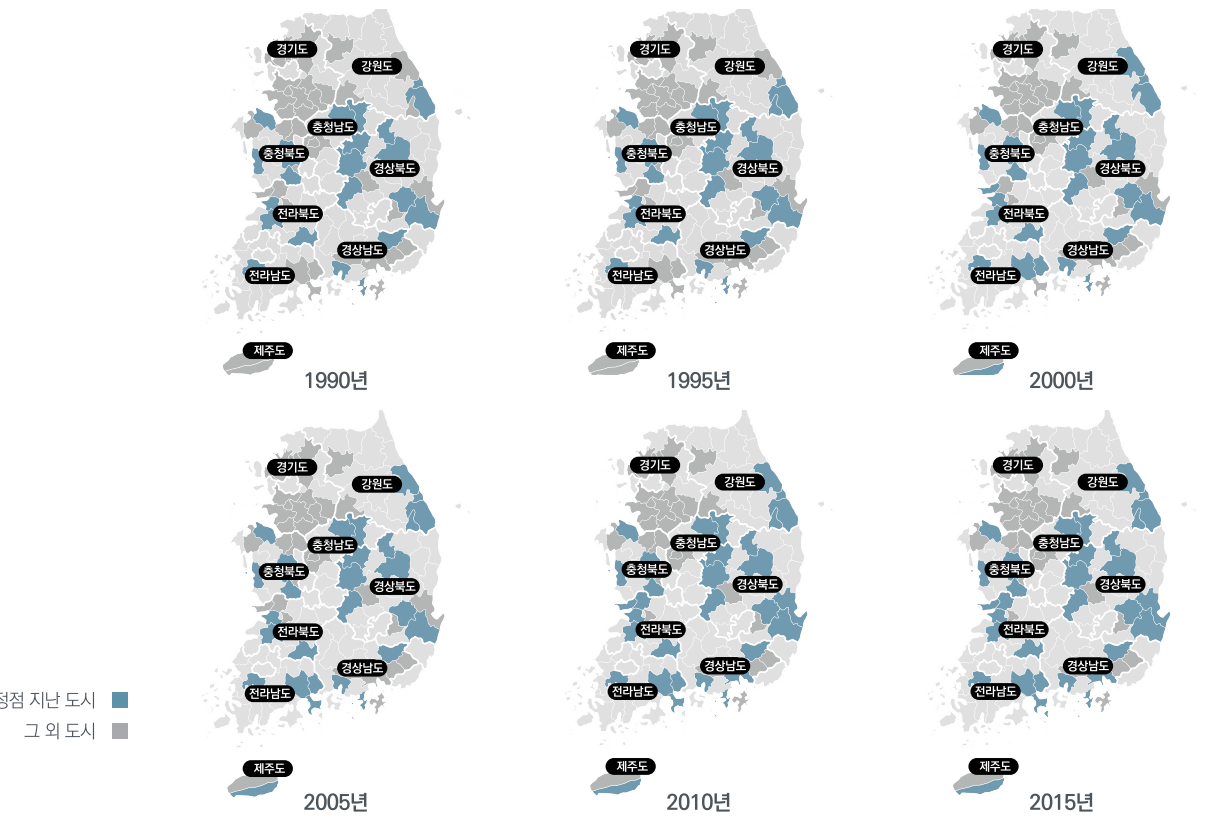
지방 도시의 실태

3.1 인구 축소의 확산과 고착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40년 전(1975년)에 비해 인구가 줄어든 상태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는 1995년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축소 현상은 도시별로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정점을 지난 지 10년 이상이 된 도시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985년에는 19곳이었으나, 2015년에는 37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은 인구정점을 한 번 지난 이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인구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축소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도시의 경우 자구적인 노력으로 축소상태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 연도별 정점 지난 도시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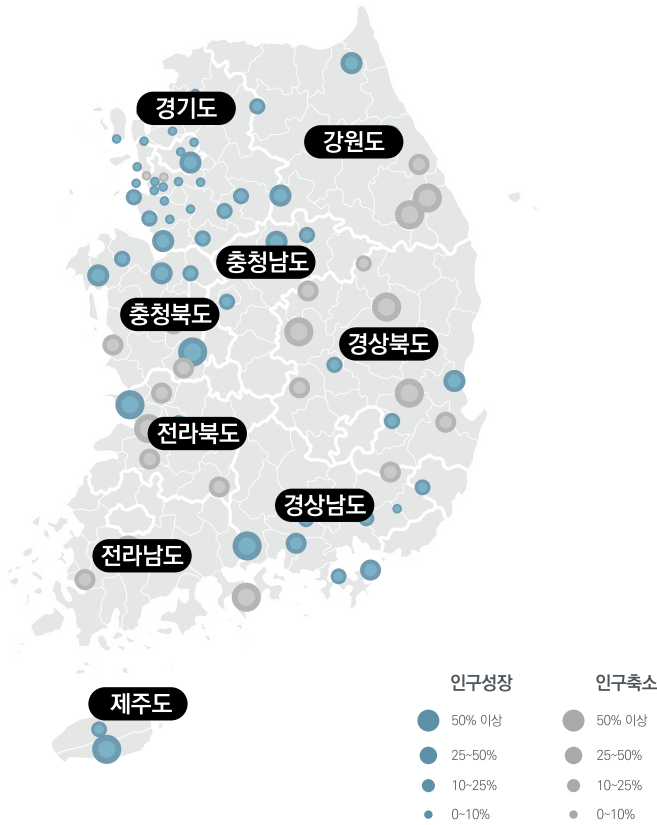


3.2 부동산 방치 현상의 보편화

주택도 비어가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빈집 수는 106만 8,919호에 달하는데, 이는 20년 전 (36만 5,466호)에 비해 약 2.9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최근 20년(1995~2015년) 간 공가율도 4.0%에서 6.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도시별로 들여다보면 대체로 인구 축소를 겪고 있는 곳의 공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인구가 성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가율이 높게 나타나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인 도시도 존재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도시는 주택의 과잉 공급에 의해 빈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도시는 그동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거나, 여전히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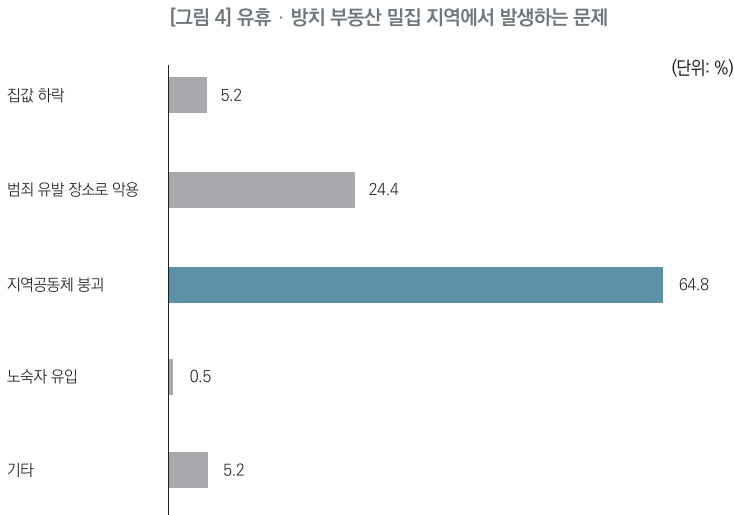
[그림 3] 공가율의 공간적 분포



자료 : 구형수 외. 2016. p.46.

3.3 공동체 기능 붕괴

인구가 빠져나가고, 빈집이 늘어나는 마을이나 동네에서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삼척시·상주시·김해시·보령시 등 지방 도시 4곳의 유희·방치 부동산 밀집 지역 거주민 213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응답자(64.8%)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를 우려하는 응답자(24.4%)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즉,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유희·방치 부동산 밀집 지역 거주민들은 공동체 붕괴나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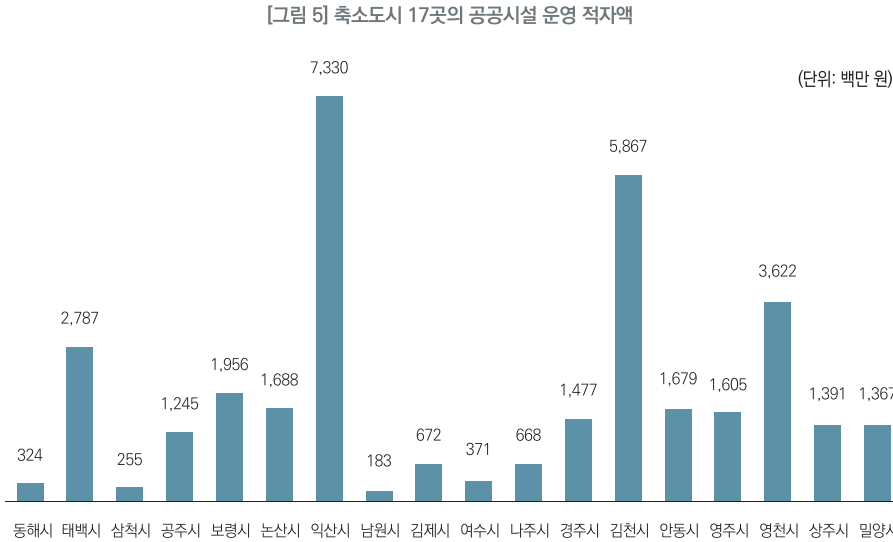


자료 : 구형수 외. 2016. p.85을 재작성.

3.4 공공시설 운영 적자

인구가 줄어들면 공동체 기능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인구 감소는 곧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축소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곳의 축소도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7곳이 대규모(설치비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당 공공시설을 폐지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유발한다.



자료 : 구형수 외. 2016. p.76을 재작성.

#4 마치며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지방의 많은 도시는 이미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도시가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는 지방 도시의 축소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지방의 도시에서 인구 축소의 고착화, 부동산 방치, 공동체 기능 붕괴,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 열거한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축소 현상에 따른 이들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향후 도시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제·교류인구를 끌어들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집약화와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 2016.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통계청. 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특집 3

인구감소 도시에 대한 맞춤형 정책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지요 우넨 츠카사(2015)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저서를 통해 마스다 히로야(2015)의 '지방소멸'을 반박하였다. 그는 지방소멸이 일본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침체 원인을 회피하기 위한 허구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지방의 문제는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쇠퇴하는 재정구조에 있고, 적자 내는 노후 공공시설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공원조지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간개발 수요가 줄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늘어나고 인구성장시대 과도한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계획 시설을 과다하게 공급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2 인구감소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

첫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적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구증가 열망 증후군이라는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틀을 바꾸고,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여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고민을 도시계획에서 담아내야 한다. 인구감소시대 적정 도시계획은 인구감소시대 시간-거리 단축을 통해 서비스가 거리와 상관없이 압축되는 스마트 압축도시 공간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공간구조는 물리적 거리 개선을 위해 SOC를 확충하는 방식이라면, 장래 공간구조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스마트 도시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시대에는 생활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며 생활인프라 공급형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생활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해야 한다. 시설 간 통합연계를 지향하며 노후시설을 폐지할지, 보수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지 정하는 최적화과정이 필요하다. 생활인프라 이용방식은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집약하고 연결

(Network)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생활인프라의 공급형태는 대중교통결절지에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하고 배후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연계시켜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인구감소시대에는 유헤토지 및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인구성장시대에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추구해 왔지만, 인구감소기 조 하에서는 도시 내부의 공유지 유헤재산이나 빈집은 도시를 재생하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공공 재산을 활용해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비어진 건물을 문화시설이나 인구집객시설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유헤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을 통해 공간에 투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대규모 공유재산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검토할 만하다. 폐교재산, 철도 유헤부지 등의 활용 및 촉진도 필요하다. 유헤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공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집객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위기에 처한 지자체마다 출산장려정책이나 귀농취촌 활성화, 투자유치, 인구유출방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유동인구를 유치하고 상권활성화를 꾀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사업과 야간관광, 지역축제 등 관광컨텐츠 발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등 다양한 인구집객 발전전략은 지역중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시설의 유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응답형 공공교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시대 SOC 정책은 교통량이 전무한 도로를 제거하고 콘크리트(아스팔트)를 재활용하고, 도로자산관리기법을 통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하며 최적 유지관리 시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령자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벽·오지 지역에 수요응답형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부문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스마트 순환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의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토양복원 뿐만 아니라 버려진 땅을 재이용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땅을 맘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빗물장독대, 둠벙, 흙길, 도랑 살리기 등 전통기법을 활용하는 자연순응형 물순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양질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인프라를 광역화하며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스마트 순환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환경 인프라를 적정 기술,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통해 압축도시에 맞게 정비하고 주거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중요한 과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새로운 국토공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집 4

인구감소시대, 한계(限界)마을의 다양한 재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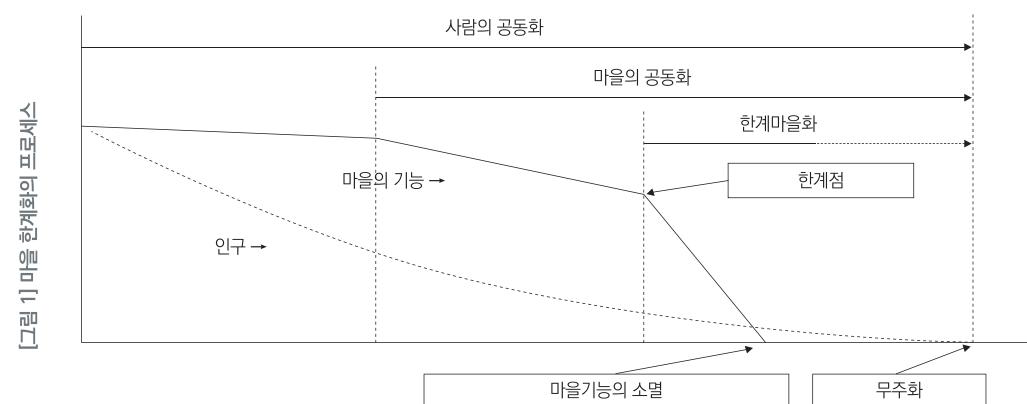
조영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인구감소시대, ‘한계마을’과 ‘마을소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계(限界)마을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사회학자 오노아키라(大野晃, 2005)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개념으로, 그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마을인구의 절반을 넘어 관혼상제를 시작으로 농업활동, 마을관리 등 사회적 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놓인 마을’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마을의 한계화 프로세스로 ‘사람의 공동화’ → ‘마을의 공동화’ → ‘한계마을화’ → ‘소멸’에 이르는 단계를 제기하였다. 즉, 한계마을이란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해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한계마을’과 ‘마을소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인구감소가 피할 수 없는 미래모습으로 전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마을이 가졌던 원래의 적정규모로 회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즉, 농



출처 : 小田切徳美, 2009

경사회와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일정 규모의 마을이 근현대 경제성장시대의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와 함께 그 규모가 적정기준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마을은 그 원래의 적정 규모와 수준을 회복해 가는 회귀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최근 농어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이농·탈농 등의 인문사회적인 문제, 빈집 및 휴경지 등의 물리적 공간의 문제 등은 모두 마을이 안정된 상태를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성장통(?)’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한 적정규모로의 회귀과정의 결과로 간주하기에는 다음의 부정적인 시각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첫째, 농어촌 마을에서 과소화와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이 중국에는 그 원래의 적정 규모로 회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정 규모에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마을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해 나가야 하나, 현재의 추세를 볼 때 대부분의 마을이 안정성을 지향해 가기 보다는 오히려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인구 ‘0’의 완전한 무주화를 의미하는 마을의 외형적인 소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소멸(마을로서의 기능 상실)은 실제 상당수의 마을에서 이미 진행되었고, 또한 대다수의 마을이 그러한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러한 마을의 소멸은 국토 정주체계 및 사회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마을은 국토 정주체계의 최하위 위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성단위로 마을의 과소화나 소멸의 문제는 마을(자연마을, 행정·법정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에 이르는 정주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결국 국토 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을 형성하는 원천이 마을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마을의 소멸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의 상실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마을의 소멸은 곧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농업·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의 중심에 농어촌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즉, 마을은 이제까지 국토보전 및 식량안보의 파수꾼이자 국가와 지역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계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마을의 소멸은 곧 마을이 보유하였던 다양한 긍정적 기능의 상실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2 모든 한계마을을 재생시킬 수 있는가?

“마을의 소멸은 곧 국가와 사회적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한계마을을 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소멸될 마을이라면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의 투입

과 노력은 낭비이고 차라리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소멸로 향해 가는 한계 마을을 살려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히 결론 짓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는 사안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 마을소멸에 대한 양성화된 논의와 함께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마을에 대해 재생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도·농간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생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실제 도시-농촌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마을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또한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존 ‘재생’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재편’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재생’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그 원래의 기능이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 하는 노력이라면, ‘재편’은 마을 내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의 외부 자원과 역량까지도 아울러 그 기능이나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개념이 구별된다.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락커뮤니티 재편’의 사례도 ‘재편’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재편의 새로운 방법으로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이하 철퇴론)’이 등장하면서 일본의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퇴론’은 대다수의 마을이 아무런 대책 없이 소멸(소극적인 철퇴)을 맞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간적 이전 등 적극적인 방법의 공간적 재편(적극적인 철퇴)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논리이다.(조영재 등, 2018)

물론, 가능하다면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쇠퇴해가는 마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생시키는 ‘재생’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실제 모든 마을이 ‘재생’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재생이 가능한 마을은 재생을 도모하되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한계 마을)에 대해서는 ‘재편’ 등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계마을 재편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한계마을의 재편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기능적 재편’과 ‘공간적 재편’을 들 수 있다. ‘기능적 재편’은 다른 말로 ‘커뮤니티 재편’이라 할 수 있으며, 물론 ‘공간적 재편’도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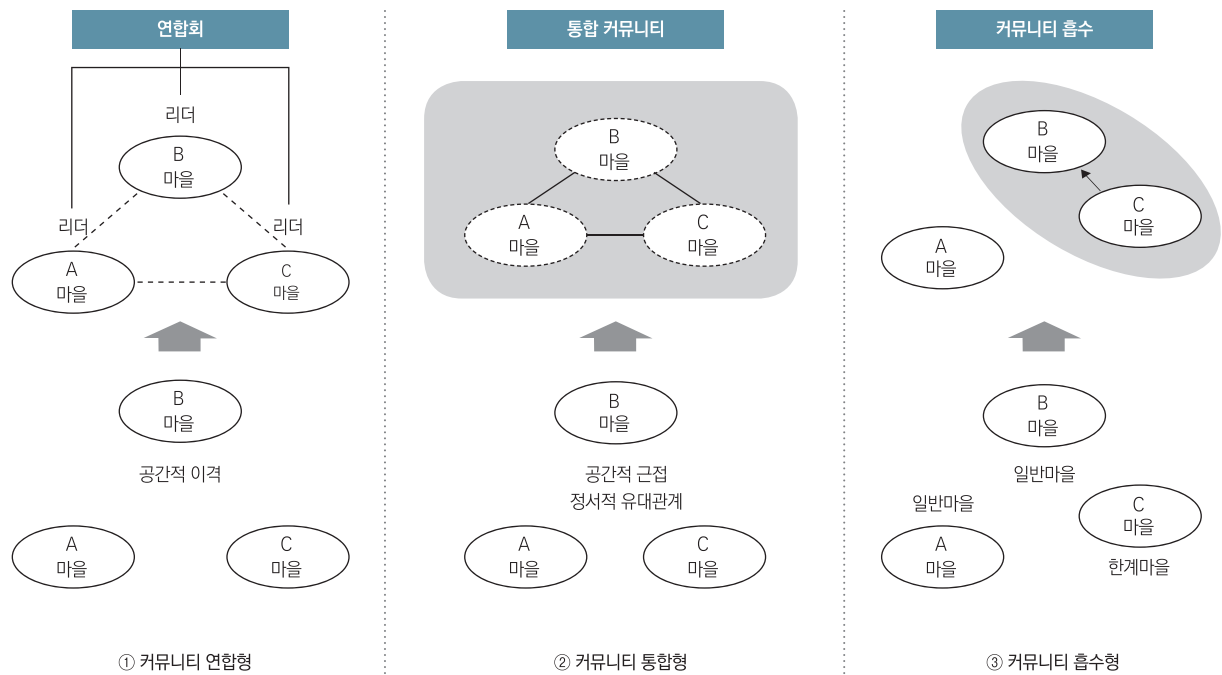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한계마을은 인적자원 부족과 공동체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는 다시 회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능적 재편’은 복수의 마을을 묶

어 상호기능을 공유하고 교류를 통하여 커뮤니티 기능의 새로운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이며, ‘공간적 재편’은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인 변화를 통해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거나 공간적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능적 재편’에는 복수의 마을이 기존 마을의 기존 커뮤니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뮤니티 리더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조직(연합회 등)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① 커뮤니티 연합형’과, 리더나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마을의 커뮤니티 전체가 대상이 되어 새롭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② 커뮤니티 통합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일반마을(비한계마을)이 중심이 되어 그렇지 못한 한계마을의 커뮤니티를 흡수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③ 커뮤니티 흡수형’ 있다.(조영재, 2015)

이 중, ‘커뮤니티 연합형’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기존 커뮤니티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준한계마을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통합형’은 ‘커뮤니티 연합형’과 여건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을간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흡수형’은 한계마을을 대상으로 인접하여 여건이 우수한 일반마을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유형으로, 이러한 ‘기능적 재편’ 유형 모두 ‘행정적 재편(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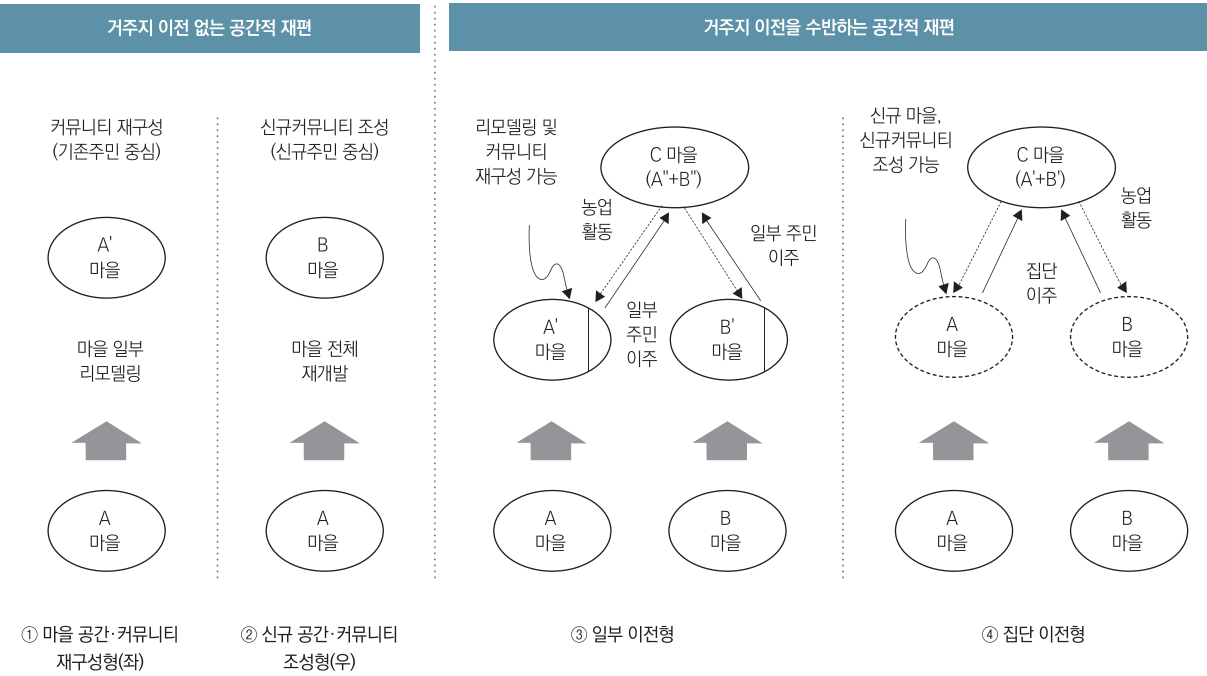
[그림 2] 한계마을의 기능적 재편 유형



한편, ‘공간적 재편’은 거주지의 이전 여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우선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공간을 재편하는 방법으로는 마을 전체의 재개발이 아닌 마을의 일부만을 리모델링하여 외부 인구의 유입을 통해 커뮤니티를 새롭게 구성하는 ‘① 마을 공간·커뮤니티 재구성형’과, 마을전체의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② 신규 공간·커뮤니티 조성형’이 있다. 여기서의 새로운 커뮤니티란 기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아닌 귀농·귀촌 등의 외부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마을 공간·커뮤니티 재구성형’은 주로 기존주민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규 공간·커뮤니티 조성형’은 주로 신규주민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조영재, 2015)

또한, 공간적 재편에서 거주지의 이전을 수반하는 방법으로는, 마을 전체가 아닌 고령자 등 특정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가 이전하여 한 개 또는 다수의 마을에서 이전해 온 주민이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③ 일부 이전형’과, 마을 전체 주민이 이전하여 새로운 마을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④ 집단 이전형’이 있다. ‘일부 이전형’의 경우, 이전을 통해 공간나 공터로 남겨진 공간은 이주해 나간 주민들의 왕래를 통해 농업활동을 지속해 나가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 인구를 유입시켜 마을 커뮤니티를 재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집단 이전형’의 경우도 집단 이전을 통해 남겨진 기존마을 공간은 이전한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활동을 이어가거나, 공간적 재편유형 ①과 ②의 방법을 통하여 신규마을 조성 및 신규커뮤니티 조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조영재, 2015)

[그림 3] 한계마을의 공간적 재편 유형



#4

맺음말: 한계마을 재편의 적용 가능성과 과제

실제, 이상의 재편 방법 중 몇 가지 형태는 이미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인구절벽시대에 따른 콤팩트시티의 개념에서 다양한 작은 거점의 조성은 주변지역 또는 주변마을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커뮤니티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가 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있어서도 기존 공동체의 약화에 따른 대안으로 연합회나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재편이 시도되어 왔다. 또한, 공간적 재편의 측면에서도 계절적이나 상시적인 이주형태인 ‘공동생활홈’ 조성과 신규 공간·커뮤니티 조성형태인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기존 마을 재생의 보완 형태로 시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대안 형태로의 재편은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마을에 있어 재편의 방법은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향후 다양한 재편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노력을 통한 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계마을 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티 재편(커뮤니티 복원과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기능적 재편을 우선 고려하되 마을이전 등의 공간적인 재편을 적용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마을 주민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 마을공동체의 소실을 최소화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영재 외,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3-07

조영재 외, 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4-07

조영재, 2015,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충남리포트 제170호

조영재 외, 2018, 한계마을정책 개발을 위한 최근 일본의 한계집락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연구, 농촌계획, 제24권 제1호, pp.21-32

大野晃, 2005, 限界集落—その実体が問いかけるもの、農業と経済, 第71券3号, pp.5-13

小田切徳美, 2009, 農山村再生—「限界集落」をこえて, 岩波書店

林直樹 外, 2010, 撤退の農村計画—過疎地域からはじまる戦略的再編, 学芸出版社

福与徳文, 2011, 地域社会の機能と再生—農村社会計画論, 日本経済評論社

논단 1

통합물관리 소유역중심의 물자치권이 필요하다¹⁾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1) 이 글은 2017년 단기교육결과보고서(충남연구원 이상진)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가·보완한 것임

#1

시작하며

지난 1991년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고 어느덧 27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진행 된 지방분권도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일부분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분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분권이 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전형적 체계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도맡고 있고, 반면 지방정부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체계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협조와 정부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물 관리 영역의 경우 분권 또는 자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물 자치권’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정도이다.

물 관리 정책의 기본구조인 국토 전체와 광역정부가 공유하는 주요 권역별 물이용과 관리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집행과정은 지류하천유역 중심의 소유단위로 실행되어야 실천력이 높아지고 물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2

유역의 물관리 문제

1. 유역 중심의 물자치권 인식 미흡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는 중앙집중형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주로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 등에 머물러 물자치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 할 수밖에 없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나 의견이 부족하였고 유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었다.

하천의 유역관리를 중심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었더라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 후속 관리는 유역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된 수질과 수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인식 문제는 그동안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의 물자치권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유역 내 조정체계 미비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 물 관리의 경우, 대유역 중심체계로 일부는 유역의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하천은 규모와 행정구역에 기초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구분되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지방정부가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 일괄관리가 어렵고, 지방정부 간, 이해당사자 간 수리권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을 조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3. 유역 내 물 통합관리 미흡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다원화 된 체계로 유역의 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유역 내 물의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유역의 물 관리에 대해 순화체계 전반을 통합하는 관리체계로 설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2017년 8월부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4대강 권역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관리포럼’을 운영하고 가칭 「물기본법」제정 등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럼은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학회(수량, 수질, 수생태계 등),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70여 명의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7개 분과(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유역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4. 물관리 자원부족

국가와 지방이 바람직한 물 관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려면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유역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 관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물 자치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이나 지방차원의 자립적 물 관리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유역 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모두 전담할 것이 아니라, 물 관리의 수혜자가 일정 부분을 충당하고,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과 인력 등 물 관리 기능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5. 주민참여 비율

물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문제 해결과정에 단일행위자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반응성을 제고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반대 의견 개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협력을 이룰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관련 정책이나 계획이 주민과 지방정부의 충분한 참여 없이 주양부처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은 국가소유라는 이유로 유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소속 공공기관 역시 부분적인 참여에 머물러 소유역중심의 통합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소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의 구축

1. 물 관리 인식의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역사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물 관리가 지역중심, 특히 유역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반면 단방제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 기초한 행정구역 중심의 물 관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유역중심으로 물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행정구역 중심의 물 관리를 유역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체계 및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한 중앙집권적 형태로 현재 지역별 유역의 물 관리에 대한 권한 부여도 중앙집권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이제 우리도 유역중심의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리권의 개념 정립과 함께 유역중심의 물 자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유역중심의 물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²⁾.

2) 물자치권이란 지방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의 범위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물자치권의 개념은 물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정부에 또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지방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박종관, 2016).

2. 소유역 중심의 물 통합관리

유역단위 물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다수의 부·처,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을 하나로 총괄하고 중앙부처의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하위 단위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역통합관리를 주도할 ‘유역관리기구’가 필요하다.

‘유역관리기구’는 기본적으로 행정단위가 아닌 지리적, 수문학적 유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유역 중심의 중유역, 소유역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3. 지방의 역량강화

소유역 물 관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물 관리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관련 인력을 지방으로 배치하면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교육훈련, 연수, 파견 등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과 전문 인력의 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력개발제도(CDP)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물관리 분야가 한직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 및 기능의 정비, 담당 공무원의 능력개발 외에 지역 전문가 및 NGO를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의 상호 보완이 잘 이루어져야 지역의 다양한 물 관리 역량이 증가될 것이다.

4.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지방의 물 관리 업무는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물 관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³⁾.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중앙의 지원 없는 물 관리 업무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역이나 지방차원의 자립적 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소유역 중심의 물 관리 실행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독립을 가져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 없이 그 유역에 적합한 유역물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역 통합물관리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물 관리 기능이나 업무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적 독립 기반이 되는 재원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

3) 지방정부가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이양문제와 더불어 재정의 이양 또한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적절한 재정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는 또다른 부담만 떠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방공무원들은 기능을 이양 받는데 소극적이다.

5. 갈등 발생 문제 해소

물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내 부처 간 갈등, 중앙과 지방의 기능 이양 갈등, 지역 간 물 배분문제 갈등 및 지역 내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다원화 된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역별 통합적 물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물 사용과 오염관리는 유역 간 혹은 자치정부 간, 주민 간에 얼마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통합적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물 기본법을 제정하고 더불어 조정기능을 총리실이나 대통령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유역차원에서는 물 자치권 확보와 유역 간 혹은 지방정부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중앙에 두거나 초광역적 조정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자산인 물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지방정부 간, 주민 간 협력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6. 유역주민 참여 제도화와 물관리 거버넌스 확대

유역물관리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 및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 물관리 정책에서 소외되어 의견을 내지 못한 유역 주민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⁴⁾.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주민의 참여와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확대시켜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유역물관리체제에서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우선적으로 유역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유역위원회는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유역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이를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⁵⁾.

또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치·사회·행정 시스템, 명확한 법적 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소비자 및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재정시스템, 그리고 여러 국가 간에 걸쳐 있는 유역의 관리를 위한 해당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

4) 한국은 1990년대부터 빠른 시민사회의 성장을 보였고 여러 분야에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분야가 환경보호 분야이다. 수자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매우 높아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수립 시에는 많은 수의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정부의 일방적인 수자원정책 수립에 제동을 걸고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5)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공식·비공식 규범의 정당성과 수용성은 자율성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연계망을 형성하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4

맺으며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이동성자원이다. 또한 대류현상에 의해 대기층과 육지를 순환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물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역에 대한 통합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정교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물 관리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많은 국가들이 유역중심의 물 관리체계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별 유역의 물 관리도 중앙집권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구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유역단위 물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량과 수질관리 통합을 위해서는 적합한 유역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즉,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소유역을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물 자치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유역보다는 소유역 중심으로 물 관리가 진행될 때, 통합적인 유역별 물의 이용과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유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소유역 중심의 물 관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유역 물 관리 체계에서는 많은 요인과 이해관계로 통합물관리의 실천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일부 유역에 위치한 소유역 중심으로 물관리정책을 집행한다면 이해관계가 적어 그만큼 통합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소유역 단위의 유역주인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토지소유주 등 물의 이용과 오염물질 관리 등에 관련된 주체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질 때, 통합물관리의 자치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갑수. 1996. "대도시의 물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환경정책」, 제4권. 2호. pp.203-220.

김길복. 2005,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방안", 물산업동향, 2005년 4월호, p.12.

김인환. 1997. "물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 「환경정책」, 제5권. 1호 pp.169-195.

김종길. 1996. "위험 사회에서의 환경문제 발생논리와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제 30집. 겨울호, 809-839쪽

김종원·김창현·심우배,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국토연 2005-21.

미래기획위원회, 2009.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전략 구축방안 연구』,

박성제. 2010. 수자원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 및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용역연구.

박종관 외. 2011.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

박종관. 2016. 물자치권의 개념 정립과 과제. 충청남도 자체발표 논문.

이상진 외. 2013. 충청남도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윤성 외. 2009. 『물관리기본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최동진. 2008.3. "물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물과미래. vol.41(3). pp.17-22.

환경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0. 4대강의 진실

환경부·건설교통부. (2006). 『물관리기본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논단 2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02

#1

들어가는 말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성과는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경우가 많아 투입과 과정을 중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행태가 절차와 규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적인 목표보다는 주어진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매진해 온 결과 공공부문의 효과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관의 성과 및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기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

통합성과관리제도는 전략과 성과중심의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의 업무체계를 성과지향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미션 및 비전과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지표, 평가체계를 고려한 것으로 조직의 비전달성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객관적 평가와 보상체계의 정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공감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성과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정착하기 위한 논의들과 방향들을 제시하여 본다.

#2

성과관리제도 구축의 핵심요인

통합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성과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축 초기단계부터 다음의 5가지 원칙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및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첫째, 성과관리 및 변화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성과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의 어려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추진 노력이 없이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실행초기 어려움과 불만 등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성과관리체계가 수용되고 정착될 수 있다.

둘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성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및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의 성격과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각 부서의 전략목표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관의 전략목표를 내세우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서의 전략적 목표는 이와는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기관의 성과에 앞서 부서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기관과 부서의 전략적 목표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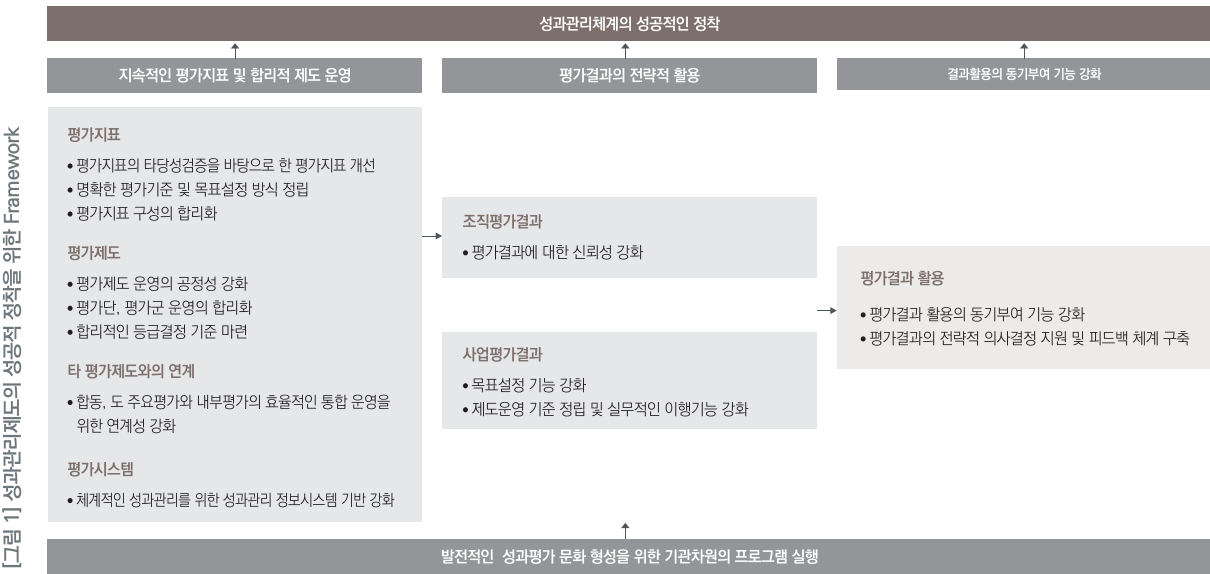
넷째,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조직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성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논의 및 교육, 참여 과정이 필요시 되며 이를 독려할 수 있는 기관 특유의 동기부여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의 정착이 필요하다. 성과관리체계는 단시간에 구축되어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고 성과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Framework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 개선, 제도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및 실행, 평가결과 활용기능 강화 및 시스템 기반 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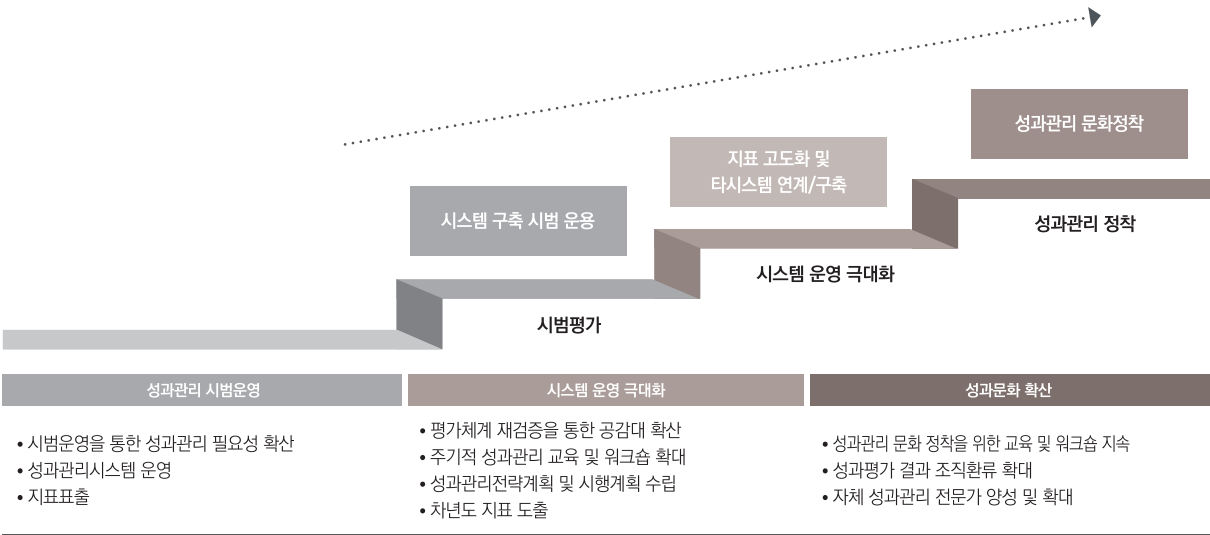


#4

성과관리체계 운영 로드맵

성과관리체계 운영 로드맵은 시범평가단계와 극대화 단계, 성과관리 정착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범평가 단계로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성과관리 확산을 위해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표고도화를 통해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후 성과관리 정착의 원년으로서 다양한 성과관리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현행 체계를 재검증하고 개선안들을 도출하며 성과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관리 리더를 확보해야 한다.

[그림 2] 성과관리체계 운영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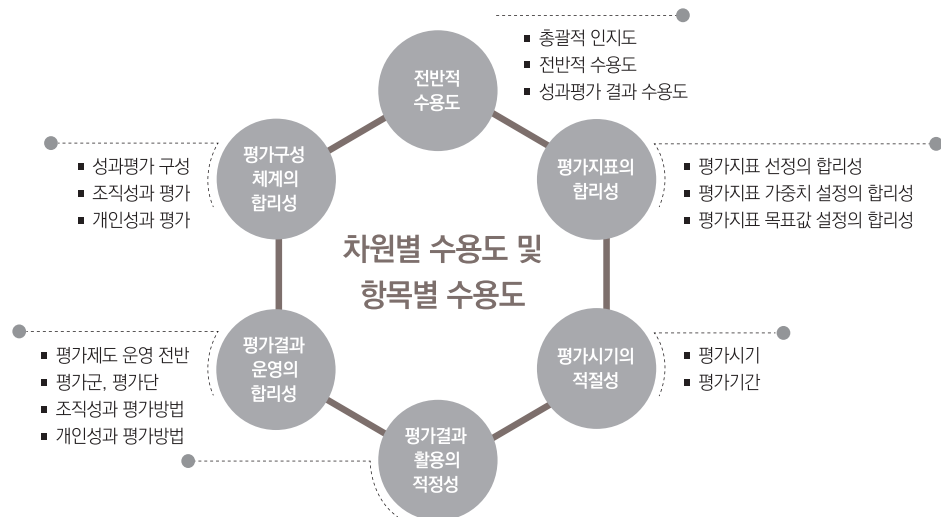


#5

성과관리 수용도 점검 및 환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제도 수용도 조사를 통해 현행 성과관리의 수준을 진단하며 성과관리제도의 향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될 성과관리제도 수용도 조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수용도 조사 분야별로 표준화된 설문척도 및 방법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 성과관리체계 수용도 점검 항목



#6

통합성과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자치단체의 비전이 전략적인 성공으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각 부서의 활동이 기관의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과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도입 자체만으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위험하며 단순히 따라하기 식의 성과관리제도 구축은 성과관리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또한, 지표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성과관리를 기관운영의 중심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도입 자체가 성공적인 성과관리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목적과 명확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또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용환경의 조성과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연공서열과 직급을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구성원들이 성과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주의 문화를 포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정착에 있어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원의 이해가 없는 운영방식은 곤란하다. 성과관리제도의 구축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구성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특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므로 관점설정과 지표 도출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보다는 예산집행의 한계와 법적 제한에 의한 업무수행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성과의 달성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특히 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조직적 특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략 중심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점이 조정되어야 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조직의 특성도 고려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평가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평가 후 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제도 추진에 대해 기관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피 평가자들이 평가체계상의 변화에 대해 관심과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기존 평가제도 및 경영혁신기법 등과의 연계성과 결과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와 보상의 연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자체역량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방향의 수정 등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와 부서별 핵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성과관리제도 구축과 성과지표 개발 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제도는 시스템 구축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지표의 수정과 보완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길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29권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 라휘문,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제61권702호, 대한지방재정공제회, 2012.
- 박해욱 외. "정부3.0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19권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 윤병섭.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도입, 활용을 위한 조건". 「유라시아연구」제4권2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7.
- 황성수 외. "지방자치단체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형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제31권1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 황해신.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6.

충남의 섬

서해의 하와이, 가의도(賈誼島)

이재언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원



가의도

개요

옛날 가의라는 중국 사람이 이 섬으로 피신하여 살았다하여 가의도라고 하였다는 설과 이 섬이 신진도에서 볼 때 서쪽의 가장자리에 있어 가의섬이라고 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안흥항은 가의도 관문이었지만 지금은 연륙된 신진도로 변경되었다. 1995년 안흥항과 신진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어 항구로서의 모든 기능은 고스란히 신진도로 넘어가고 말았다. 안흥항은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안흥성과 객관이 있었던 곳이며 세곡선들, 무역선들, 사신을 싣고 온 배들의 정박지였다. 그러나 근대화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발달되자 변화가



가의도 2구 전경

마을 입구 자갈밭



정족도

일고 있다.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연륙이 되면서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음식이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신진도는 어업전진기지로, 국가 항으로 지정되면서 수백 척의 어선들이 들어와 서해에서 잡은 고기들을 내려놓는다. 기름을 넣고 배 수리도 한다. 해마다 3월에 시작하는 꽃게잡이와 오징어 등 싱싱한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북적대면서 어판 장에 생동감이 넘친다. 유람선은 정족도, 유인등대섬 웅도, 가의도를 돌아온다. 세 개의 큰 바위가 있는데 가마솥 鼎(정)의 다리 못(족)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이름이 정족도이고, 안흥항에서 배를 타고 가의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일 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과 낚시꾼이 신진도로 몰려들면서 덩달아 가의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거리가 가깝기에 아침 첫배로 들어온 다음, 점심때나 저녁 막배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트레킹과 낚시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섬 둘러보기

가의도는 신진도 항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져 있어 배를 타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안흥-신진도 간을 연결하는 신진대교가 완공되면서 가의도는 육지와 더 가까워졌다. 40명이 정원인 여객선을 타고 가다 보면 가의도 주변에 펼쳐진 무인도들을 볼 수 있다. 죽도, 부억도, 목개도, 정족도, 사자바위, 독립문바위, 거북바위 등이 그것이다. 이 무수한 무인도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여행객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자처럼 생긴 사자바위는 웅크린 채 포효하는 듯 서 있다. 중국을 향하여 있는 이 사자 형상은 우리 바다를 지키는 모습이다. 배가 출발한 지 20분 후 가의도의 북항에 닿았다. 선착장은 다른 섬과 비교해 볼 때 짧아도 너무 짧았다. 북항의 방파제는 북풍의 거센 파도와 성난 파도를 힘겹게 막아 내고 있다.



차를 대신하고 있는 산악 오토바이

4륜 오토바이가 있는 선착장으로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물건을 가지러 나오기도 한다. 선착장 옆에는 작은 몽돌해변이 하나 있는데 어찌나 맑은지 조금한 물고기들의 노는 모습이 선명하다. 마을 입구 길은 약간의 경사로인데 옆으로는 대부분 마늘밭이다. 간판을 보니 ‘육쪽마늘의 원산지 가의도’라고 쓰여 있다. 이 섬의 마늘은 맛과 향이 좋은 우수한 6쪽 마늘로 유명하다.

선착장과와 거리가 유난히 짧은 가의도 길을 따라 올라가면 ‘굿두말’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마을 중앙에는 큰 은행나무가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 있다. 관광지 도에는 ‘노거수(老巨樹)’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난 1996년 5월 태안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높이 40m, 둘레 7m의 이 나무의 수령은 450년으로 추정되었다 한다. 그 밑으로 주황색과 원색의 지붕을 이고 있는 집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다. 굿두말 바로 옆 마을인 ‘큰말’은 동쪽으로 이어진다. 큰말 위를 지나가면 마을 아래 조그만 해변이 보이는데 큰말장별해수욕장이라 부른다. 해안가의 암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다. 신장별을 향해 동쪽으로 가는데 활처럼 휘어진 아름다운 해안선이 계속 펼쳐진다.

가의도 신장별 해수욕장

가의도 북동쪽 산등성이를 타고 가면 가의도 신장별 해수욕장이 나온다. 이 해수욕장은 생각 하였던 것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래알은 인절미의 떡가루만큼이나 고왔다. 해수욕장 앞 해변에는 사자바위, 독립문바위(‘아기 업은 코끼리바위’라고도 함)와 거북바위 등 기암괴석이 많다. 수정바위는 홍도나 백도처럼 경관이 아름답다.

보는 각도에 따라 독립문을 닮았다고도 하고, 코끼리바위라 부르기도 하는 이 바위.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할멈바위’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다. 오래전에 마귀할멈이 조류가 거세기로 악명 높은 부근의 ‘간장목’을 건너다 속곳이 젖자 핫김에 소변을 봤는데, 그때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이다.

독립문바위 우편에 나란히 붙어 있는 ‘돛단바위’가 있다. 바위의 생김새가 돛을 단 풍선을 닮아서라고 한다. 수평선 너머로 고기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선과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작은 어선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가의도해수욕장은 가의도가 ‘서해의 하와이’라는 별명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 가의도의 ‘흔장별해수욕장’ 좌우로 희한한 괴석들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서 있다. 지도에는 ‘신장별’이라 되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흔장별’이라 부른다. 몽돌이 많은 이곳을 사투리로 ‘장부리’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흐열다’는 뜻의 ‘흔’이 붙어 이뤄진 지명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아서 그런지 때 묻지 않는 자연 그대로이다.

신장별 해변의 고운 모래가 300m 정도 되는데 파도를 밟 삼아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다.

가의도의 남향

섬을 한 바퀴 둘러보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나왔다. 경사가 심한 동쪽 방면만 빼고 세 방향에서 섬을 돌아본다. 굿두말에서 조그만 재를 넘어가면 남향이 나온다. 가의도의 남쪽향 왼편 바다 위에 떠 있는 목개도와 정족도의 무인도가 서 있다. 남향 항구 앞의 솔섬바위, 방파제 바로 앞에 서 있는 멋진 모습이 솔섬의 특징이다. 솔섬은 물이 빠지면 걸어가 수 있다. 솔섬 정상 부근 양쪽에서 자라고 있는 두 개의 소나무가 매우 인상적이다. 파도와 해풍을 맞으면서 그래도 끈질기게 견뎌내고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남향 남쪽에는 손바닥만 한 몽돌해변에 배들이 올라와 있다. 파도가 거세 배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안전하게 육지로 올려놓았다가 필요할 때 바다에 띄워서 사용한다. 몽돌해변에서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지압을 겸해서 몽돌 위를 거닐어 본다. 발밑에 밟히면서 나는 소리는 작은 몽돌들의 외침이었다. 탁 트인 서해의 특성상 늘 바다는 거칠어서 남향도 연이어 하얀 포말을 일으킨다.

2013년 여름, 인천으로 올라가면서 남향에 배를 대놓고 일행들이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남향은 불과 3~4가구가 사는 곳으로 본 마을과 약간 떨어져 있다. 겨울에는 남향이지만 태풍이

가의도에 정박중인 백화산호





가의도 마을

오면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곳이다. 겨울에 북풍이 불면 북향에 배를 대지 못하고 남향으로 온다. 파도가 거세어 방파제가 부서진 상태였다. 남향은 북향과 작은 고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여기다 객선을 대면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한다.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약간 높은 산길을 넘어와 짐과 사람을 싣고 올라간다.

다시 여객선을 타기 위하여 북향으로 향했다. 이제 막배가 올 시간이 되어 그런지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가의도는 육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섬이다. 서해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면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정기여객선의 혜택을 보지 못하다가 늦게야 국가지정항로가 되었다.

나룻배의 추억

가의도는 논이 한 평도 없다. 섬이 적고 교통의 불편 때문에 신진도가 연륙되기 이전에는 안흥으로 이사를 많이 갔다고 한다. 60~70년대 가의도 사람들은 육지 나들이를 위해 마을에서 1년 계약으로 뱃사공을 정해놓고 나룻배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당시 서해안의 빠른 조류 때

문에 물때에 맞추어 노를 저어서 다녀야만 했다. 바람이 불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면 몇 날이고 안흥에서 기다려야 했다. 특히 겨울에 고생이 많아 아예 안흥에 동지를 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정말 섬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교통수단인 나룻배에는 술한 사연들이 있었다. 많은 이야기 소재를 만들어 줬던 뚝단배가 통통배로 바뀌고 지금은 낙도보조항로로 배정된 여객선이 섬 주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다. 배를 타고 떠나가는 자식을 보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던 섬 어머니들, 그리고 명절 같은 날에는 행여나 물으로 떠났던 자식들이 오지나 않을까 해서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모습을 어렵잖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연락선으로 인한 수많은 사연들은 섬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제 그 배는 수많은 사건과 추억을 간직한 채 안흥항에서 신진항으로 옮겨와서 하루에 세 번씩 오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가의도 주민들의 생업

가의도에는 36가구 72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가의도 주민들의 성씨 분포가 다소 특이해 보였다. 중국의 가의(賈誼)란 사람이 이 섬에 피신해 왔다가 가(賈)씨는 곧 떠나고 그를 수행했던 주(朱)씨만이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처럼 섬에는 가씨 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씨, 김씨, 고씨만이 13대째 살고 있었다. 유서 깊은 섬마을답게 지금도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있다. 가의도는 90%가 산지이기 때문에 경작지가 부족하여 농사는 어렵고, 멸치잡이와 해삼, 전복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랫녘 사람들이 멸치잡이를 하면서 그 일을 도와 돈을 벌기도 했으나 지금은 멸치공장을 하던 이가 육지로 이사를 가면서 고기잡이와 홍합 채취 외에는 다른 소득 수단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지난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서남해안의 청청해역, 천혜의 황금어장이 검게 물들게 되었다. 이 사고로 충남은 물론 전북과 전남 지방, 심지어 제주도에 속한 추자도까지 타르가 밀려났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다. 서남해 곳곳의 리아스식 해안의 섬과 후미진 절벽 바위틈엔 많은 기름이 남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했었다. 그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찾기 힘든 섬 지역을 방제하는 것은 멀고 험난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해안선과 해수욕장들이 모두 제 모습을 찾아서 지금은 피서객이 마음 놓고 피서를 즐긴다. 자연의 치유 능력과 복원은 놀랍기만 하다. 당시 섬사람들이 겪은 원유 유출 사고 피해는 육지보다 더 심각했다.

섬사람들의 바다는 논이고 밭이다. 여전히 홍합, 미역, 톳을 따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가의도 사람들의 터전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맘이다.

충남마을기행

찬찬히 둘러 보श्य유, 서산 회포마을

이유나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서산시 대산읍, 바다가 마을 입구까지 들어왔다 나간다 하여 ‘회포’라 이름 붙여 진 마을이 있다. 충청남도 시범마을로 지정되고, 6차산업박람회 대상에,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회포마을의 최근명 위원장에게 호박이 넉쿨째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왔다.

젊은 시절부터 낙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와 성공을 거두었지만, 세계 시장이 개방되며 국내 낙농업이 힘을 잃자 갖가지 도전 끝에 호박농사를 선택한 최 위원장.

서산회포마을 입구



최근명 위원장



김하은 사무장

인터넷 사용도 생소했던 90년대 말, 그는 시대적 흐름에 앞서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한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실패와 마주했다고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한 첫 주문이 들어왔고, 그 한명의 소비자는 위원장의 인생과 더불어 회포마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점점 늘더니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호박농장도 더불어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켜 가던 중, 농장에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한다.

시골에 와서 뭘 할 수 있으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최 위원장은 큰 뜻 없이 농장체험을 하게해주고,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호박농장체험은 주말에 관광버스 두 대를 마을에 들어오게 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고, 일손이 부족해 자연스레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팜스테이.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 호박농장으로 체험을 오는 소비자들을 4~50가정과 함께 맞이했고, 더불어 체험의 종류와 참여 인력도 넓혀 나갔다. 그렇게 지금의 체험마을이 되었다.

현재 75가구 약 2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회포마을은 주변에 공단이 많고, 마을의 땅이 넓어 다른 마을에 비해 인구 구성이 다채롭다. 땅이 넓으면 농업의 기계화가 용이해 정착하기가 비교적 쉬워지기 때문에 젊은 층의 귀농이 많다고 한다.

고향이 대전인 회포마을 김하은 사무장도 서산에 사는 친구를 보러 왔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 회포마을에 정착하게 된 귀농인이다.



- 1) 벼 수확체험
- 2) 호박등 만들기체험
- 3) 흑미천연염색수수건 물들이기체험
- 4) 호박피자 만들기 체험



매년 5~6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회포마을에서는 호박피자만들기, 호박화분만들기, 호박등만들기 등 생산물을 이용한 체험과 고구마캐기와 벼수확체험 등 농촌마을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횃개벚가리제’라는 마을의 전통 축제를 통해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민속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

매년 정월대보름, 이월 초하루에 열리는 ‘횃개벚가리제’는 농사철을 앞두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농민놀이라고 한다.

최위원장은 변화만 모색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농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천천히 가야 한다고 했다.

시골 인심이 녹록치 않다. 더군다나 관광버스가 마을에 들어온다고 당장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낯선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은 비단 시골에서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 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당장의 이익보다 이 마을이 천천히, 하지만 오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일례로 10년 전,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벚꽃나무 길을 만들었다. 지금 심은 나무가 당장의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부지런히 보낸 시간이 선사할 그 풍요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묘목이 아름드리 나무가 된 지금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여행갈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무척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마을길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못 할 정도로 풍요로웠다.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쓴 위원장은 지금의 마을을 한마디로 ‘평안’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체험마을에 비하자니 체험관이 꽤 작아 보였다. 이렇게 작는데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회포마을만 눈에 담고 있지 않았다. 서산시 전체를 보고 있었다. 회포마을에서만 먹고, 회포마을에서만 자고, 회포마을에서만 노는게 아니다. 서산 40여 개의 마을을 연계시켜 먹고 놀고 자는 그 일련의 체험을, 행사만 잠깐 보고 집으로 열린 돌아가는 ‘들름’이 아닌 구석구석 다니고 온 김에 주변의 경관들도 다 둘러보는 ‘여행’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서산 전체를, 나아가 충남 전체를 ‘여행’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마을을 방문했던 날도 최 위원장은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라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떴다. 서산 전체의 마을들을 연계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미 수요가 충분했으니, 아니 오히려 수요부터 있었으니 더 많은 이윤을 욕심낼 수 있었다. 회포마을을 거인처럼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 쉬운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 어려운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있었다. 넘치는 수요를 내 욕심에 채우지 않고, 마을 전체와 나눈, 이제는 서산 전체와, 더 나아가 충남 전체와 나누려고 하는, 달리고 싶은 다리에 힘을 꼭꼭 쥐가며 모두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최 위원장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쉬며, 보며, 천천히 ‘여행’하고 싶다면 다가오는 여름 회포마을에 들러보자. 농장체험은 물론 십여 분 거리에 있는 서해바다를 덤으로 볼 수 있고, 최위원장의 주변 명소 추천과 회포마을의 욕심 없는 인심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당일 만난 서산 투어 중인 중국유학생들



충남 시장 플러스

닷새마다 열리는 무지갯빛 동네! 부여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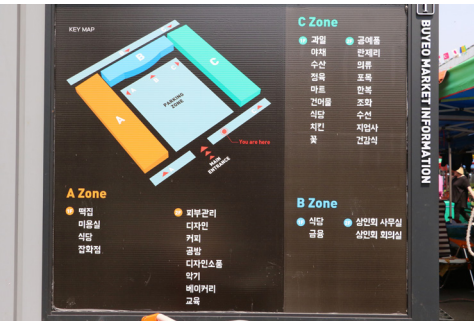
정봉희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남에는 총 68개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맛이 있다는 그 시장. 사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또 다른 작은 동네입니다. 5일마다 열리는 그 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요즘 말로 '정모'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시장의 옛스러움은 사라지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는 모습이 길게 늘어선 마트같지 않은가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전통시장의 정취와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앞으로 필자는 우리 충남지역의 전통시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시장의 맛과 멋을 꼬적거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장만 구경하면 2% 부족하겠죠. 시장 주변에 가볼만 한 곳을 하나씩 엮어보려 합니다(오로지 필자의 주관적인 선택이죠). 시장을 이리저리 걷다보면 세상일 잠시나마 멀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도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매력. 바로 덩과 에누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시장에 갑니다.<편지자 주>

“봄바람 휘날리며~~~ 흠날리는 벚꽃잎이~~~ ♪♪”

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딱 맞는 4월의 어느 날, 부여시장에 나갔다. 오랜만에 둘러보는 오일장이다.

시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시장 입구에 들어섰다. 분주한 듯 한가한 듯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필자의 눈에 띈 할머니 한 분(좌측 사진). 쫄고려 앉으며 인사를 드렸다. 부여시장에 온 지 20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자식들 다 키우고 지금은 손자 손녀 보는 맛에



행복하시단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얻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부여시장에는 점포만 약 60개.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시장은 크게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엔 떡집, 미용실, 식당 등이 자리잡고 가운데에는 은행, 상인회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건물에는 과일, 야채, 수산, 정육, 의류, 포목 등 다양한 점포로 채워져 있다. 물론 부여시장 주변으로는 예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특화시장 골목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나. 둘러보다 보니 배꼽시계가 12시를 땡땡땡. 사실 필자가 이곳 부여시장에 올 때마다 들르는 순대국밥집이 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5천 원. 시장 주변 식당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집들이라서 그런지 손님들도 단골이 대부분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메뉴를 고를 이유가 없다. “밥줘유~” 하면 그만이다.

국밥 한 숟가락 뜨려는데 식당 밖 시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호기심 반 걱정 반... 고개를 돌려 지켜보려할 때, 식당 안 다른 테이블의 아저씨들이 얘기한다. “다 늙어서 뭐 하는 짓이여~” 그러자 “냅뉘~~~ 그래야 정드는거~~~”하는 순간! 웃겨서 국밥을 뽀을 뵈 했다.

부여시장 2층에는 청년몰이 들어서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공예품과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 약 15개가 모여 있다. 한 마디로 ‘젊은 피’로 북적거릴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청년은커녕 어르신 한 분도 안 보이는 거다. 왜 이리지~ 하면서 실망



하던 도중에 문 열은 커피숍에 들어갔다. 마침 점심도 먹었으니 말이다. 커피를 내어주시는 사장님과 대화를 시작해봤다. 사실 취조하듯(?) 물었다. “장날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아~ 다들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사실 장날에는 2층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날에는 광장에 펼쳐진 점포에만 몰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직 2층 청년몰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2층에서 내려다 본 알록달록 무지개 빛 시장. 젊은 사람들보다 50대 이상 어른이 많다(50대도 요즘은 청년이지

만 말이다). 필자 역시 시장에 오면 어릴 적 향수도 있고 해서 뭔가 마음이 포근해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도 저도 아닌 맘이다. 옛 것과 요즘 것의 가능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이랄까?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던 할머니의 아늑함 대신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보게 되었다.

참! 시장을 둘러본 다음 신동엽문학관에 가보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까먹을

뻥 했다. 시장에서 문학관까지는 자동차로 1분. 걸어가도 3~4분이면 족하다.

〈껍데기는 가라〉〈금강〉 등으로 유명한 부여 출신 시인 신동엽. 개인적으로는 위의 〈산에 언덕에〉를 좋아한다. 아마도 시인의 서정성을 가장 제대로 드러낸 작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로 이 시는 백제대교 옆 백마강변에 ‘시비’로 새겨져 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문학관을 찾아가면 몇 번이고 의아스럽고 심지어 놀라게 된다. 우선 문학관 앞에 집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오래도록 살았던 집터를 복원해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하고 있다.

둘째 문학관이 너무 예쁘다는 것. 사실 나름 부여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건축가인 승효상은 시인의 정신과 부합한 조형물에 대한 고민을 건축예술로 펼쳐 보였다. 또한 문학관 뒤편에는 부여 출신 임옥상 화백의 설치미술인 〈시의 깃발〉이 신동엽 시인이 쓴 시가 되어 바람에 나부끼는 형상을 독창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정작 문학관 얘기 대신 다른 이



신동엽 생가터



산에 언덕에

신동엽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 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요

맑은 그 숨결
들에 숲 속에 살아 갈지어이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 날지어이





야기들만...). 사실 그 정도로 이곳은 다양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충전하기에 제격이란 뜻이다.

본격적으로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면 신동엽 시인의 유품과 시들이 잘 전시되어 있다. 특히 필자는 신동엽 시인이 부인인 인병선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며 적잖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사랑의 애뜻함이 전해졌다고나 할까!

이걸로 문학관을 모두 둘러봤다고 그냥 나오면 후회막급이다. 문학관 우측을 돌아 올라가면 바로 문학관 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또 다른 경치와 감동이 펼쳐진다. 옥상을 둘러 보고 다시 가운데로 걸어 내려가면 문학관 내부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혹시 문학관을 갈 일이 있다면 잊지말길 신신당부한다.

다시 부여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부여에는 부여중앙시장도 많이 알려져 있다. 필자의 어릴 적 기억 속에도 그렇다. TV 속 맛집으로 자주 등장하는 식당들도 이 근처에 많다.

마침 시장을 돌아보는 김에 중앙시장에도 들렀다.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옛날 시장의 정취와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옛 정취만은 남아있다. 부소산성 방향으로 시장을 끝까지 돌아봤을 때였다. 오른쪽 골목을 무심히 봤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오래된 골목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그 골목 끝에는 ‘그래! 여길 찾아낸 걸 축하해!’ 이런 말을 건네듯 천장에 달린 예술작품(?)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괜찮은 구도의 사진도 한 컷 건졌다.

요즘 부여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을 열고있다. 일명 ‘백마강 달밤 야시장’이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 토에 40여 개의 매대가 펼쳐지지만, 5일장과 겹치는 날엔 열리지 않는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좋겠다(www.buyeonight.com).

부여에 가 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꼭 시장을 둘러보길 권한다. 그리고 시장 음식으로 끼니도 해결하면서 시장의 소리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부여하면 백제를 떠올리겠지만 과거의 유물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백제인이 있다는 사실!

신동엽문학관을 소개하는 브로셔에 이런 글귀가 있다. “그는 추모되는 기억이 아니라 살아 격돌하는 현재이다”라고. 역지로 좀 꺾어 맞추자면... 그렇대! 과거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를 보자는 의미다.

요즘 말로 ‘가즈아~’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무지갯빛 동네에 가보즈아~

부여 중앙시장 그리고 골목



열린마당

지역 특화 공예 자원을 활용한 공예마을 조성에 관하여...

양미숙 공주 도자예술촌 웅진요 도예가

01

개요

로봇이 대체 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예 자원이 지역 미래의 경쟁력임을 환기시키고 싶었다. 공예가치의 재조명과 산업화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려면 공예단지 조성이 가지는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역 특화 공예 자원을 활용한 공예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공예산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특화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델(안)을 발굴하려고 했다.

우선 관련 논문 혹은 보고서 등 기존의 문헌을 연구했다. 그리고 실제 사례지를 3곳 이상 방문했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는 등 밀착연구를 시행하려고 했다. 더불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공예인의 의견을 들었다.

02

연구내용

'지역 특화 공예 자원을 활용한 공예마을 조성'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공예마을 조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국내 공예마을(공동체) 현지조사 및 시사점

국내 공예마을(공동체) 현지조사 개요

국내 공예마을 현지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공예마을의 '지역특화형 발전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국내 현지조사가 해외 현지조사와 다른 것은 복지와 융합하거나 발문티어리즘¹⁾ 등 '공

동체' 성격의 공예마을과 국제워크숍이 진행되는 '공예 관련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해외사례와 같이 성격이 뚜렷한 대상을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공예마을 조성 관련 국내 사례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지역별 주요 특성화 공예자원 및 문화 수요 트렌드 조사로서 원재료, 공예인(커뮤니티), 공방, 브랜드, 전시판매장 등 지역 공예자원의 지원 및 육성 현황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내 공예마을 운영실태 및 선진사례조사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관광형과, 관주도형, 자연 발생적 대상지를 중점으로 하여 지역공예마을 발전모델로 수렴 가능한 조건을 갖춘 대표사례 5개소를 선정하였다. 그곳의 입지 조건, 조성 경위, 주관단체, 특성화 자원 및 요소와 연차별 운영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문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지역공예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발전모델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1) 충청북도 <진천공예마을>

구분	내용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672번지 일원(공예촌길 116-5)
운영주체	진천군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공동http://cafe.daum.net/dhrehdf
규모	약 125,000㎡(약 28,000평)
종류	도자기, 칠보공예, 금속공예, 한지, 천연염색, 연만들기, 목걸이, 목공예, 미술 등
설립동기	관광·공예상품 개발의욕 고취, 실용성 있는 상품개발·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
조성경위	2002년 착공, 2010년 1차 완공 후 지속 개발
투자규모	약 147억(4,821백만 원 지원)
운영현황	33개 공방, 기반시설 포함 총 37개 시설 입주 및 운영
특화요소	공방+전시판매 공간+생활공간 일체형 / 관광융합의 체험테마파크 형태

2) 충청남도 <계룡산도예촌>

구분	내용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도예촌길 71 일원
운영주체	계룡산도예촌, 충남도자기협동조합 www.cndojagi.co.kr
규모	약 16,500㎡(약 5,000평)
종류	도자공예(철화분청사기 중심)
설립동기	안정적 작업환경의 확보, 대를 이어가는 역사적 공간, 대중과 교감하는 공간
조성경위	1993년 도예공방 첫 입주(고토도예) 이후 2013년 충남도자기협동조합 설립
투자규모	개인별 투자액 다소 상이 (약 20억여 원)
운영현황	15개공방 기반시설 포함 총 18개시설 입주 및 운영
특화요소	우리나라 3대 도요지의 하나 조선도예가 이삼평과 철화분청사기의 역사적 공간

1) 휴가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를 입은 이후 사람들이 봉사의 가치를 실감하면서 발전해왔다.

3) 서울시 〈북촌 전통공방마을〉

구분	내용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길 일원
운영주체	북촌전통공방협의회(http://bukchoncraft.modoo.at) 외
규모	종로구 가회동, 송현동, 안국동, 삼청동, 사간동, 계동, 소격동, 재동 등 포함
종류	역사유적과 연결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공예의 집적화 공간
설립동기	전통공예를 재탄생시키는 중심지, 각기 다른 분야 장인들의 협업
조성경위	2011년 지역공예육성사업 당시 경공장 중심을 지향 정부가 매입한 한옥을 입주 공예인에게 임대(5년 단위 2회 계약 조건)
운영현황	관련 기관은 북촌전통공방협의회, 북촌전통공방협동조합, 연합회 등 20~30여 개의 공방이 참여한 북촌전통공방협의회 중심으로 운영
특화요소	고궁 등 역사·문화재 중심지 연결한 한옥마을에 전통공예 장인들의 집적화 2011 지역공예마을 사업 대상(시장형 공예마을) 선정, ‘경공방’ 북촌 브랜드

03
연구 결과

지역특화형 공예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생활 속 예술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가능한 공예품보다는 작가, 무형문화재 등 실생활과 별개의 예술품·문화재로 인식되는 전통 장인·업체의 공예품은 생활양식, 디자인 등 현대적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 등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세한 가내 수공업적 제작환경으로 수요분석 및 디자인·기술개발 등에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상설 판매 공간 및 전문 마케팅 인력이 부재하여 체계적 홍보·마케팅 없이 공예인 개인의 개별적 유통채널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의 단절과 불균형이다.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장인 중심)과 현대 대학교육(작가 중심)과의 단절, 상호 연계시스템 부재, 공예산업 분야에 신진 인력 유입 정체 및 단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공예교육 역시 공예 관련 학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공예관련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예 기술 및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창업·마케팅, 디자인 교육 등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저가의 관광기념품은 국적 불명의 동남아·중국산이 잠식하고, 고가의 시장은 서구의 명품 브랜드가 대체하는 등 국내의 공예산업은 중·고가 시장이 없는 양극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 또는 차별성이 없어 전국의 공예시장이 유사상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개발 및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 교통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공예’를 매개로 지역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인이나 지역 공예품을 활용하여 공방창업 및 유통·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지역 공예촌과 지역 특화 공예품을 기반으로 축제 및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예를 취미 활동과 연계하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광·전시이벤트· 교육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공예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공예문화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모델의 적용 및 제언

조사를 통해 살펴본 국내의 특화된 공예문화산업 관련시설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융합’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창의적 혁신’과 ‘문화적 융합’ 및 ‘소비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자국 공예문화산업의 입지를 넓히며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공예 문화 산업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시행으로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미더운 언덕’에 기대기만 하다가는 공예문화의 부흥에 이르는 길은 계속 험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발전모델의 제언에서 ‘조성’, ‘육성’,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보존·보호 대상인 공예문화’를 ‘핵심적 창조산업으로서의 공예 문화 산업’이라는 가치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04
향후 과제

지역특화형 공예마을(공동체)의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혁신의 영역과 경로를 찾기 위한 지역특화형 공예마을(공동체) 유사 유형 비교 분석과 중·장기 발전모델’에 이어 ‘해외 공예문화산업 관련시설 유형별 발전모델의 국내 적용 검토 및 제언’을 하였다. 발전모델의 국내 적용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더 연구하여 정책 반영 및 실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① 수준 높은 공예품 생산을 위한 협업과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사회적 공예기업’의 모색
- ② 취약지역 및 계층과 함께 하는 공예복지의 역할모델과 발문 투어리즘 사례 창출
- ③ 미래 공예소비자인 청소년들이 공예문화와 만날 수 있는 기회 공간의 확충
- ④ 공예가들의 창작을 위한 공방시설 지원과 공예체험테마파크의 민간자본 참여
- ⑤ 권역별 공예지원센터 구축 및 밀착지원으로 지역공예 활성화

이제, 국내 공예문화산업이 창의적으로 혁신을 수용하고, 문화와 통상의 융합으로 공예문화산업을 부흥시키느냐가 시대적 과제로 다가왔다. 기술융합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공예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대적 가치를 확보하며 영역을 확장할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관행, 시설과 공간 및 정책 등 전반을 혁신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안적이며 창의적인 발전모델의 도입을 제안한다.

해외리포트1

뉴질랜드 마켓 현황 및 시사점

윤정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뉴질랜드 일반개요¹⁾

뉴질랜드(마오리어:Aotearoa)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1930년대부터 복지 국가가 확립되었고,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으로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인구 구성은 대부분 유럽계이고, 가장 큰 소수민족인 마오리족, 아시아인, 그 다음으로 태평양 제도민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화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는 대부분 마오리족과 초기 유럽 정착민들에게서 파생되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52년에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섰다. 영국의 식민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오리족과 영국 간 분쟁이 발생, 1843년~1870년 사이 두 차례의 마오리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은 마오리족에 대해 유화정책을 펴서 인종분쟁이 약해지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과의 공존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고,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11월 25일 독립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총 5,350명이 영국 연방으로 참전하였고,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뉴질랜드 인구는 약 47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50만 명이 뉴질랜드의 수도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약 14%가 원주민인 마오리족이며, 그 외 폴리네시아계와 아시아계가 각각 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7년 6월 현재 인구 및 면적

순위 (인구)	도시 지역	인구	면적(km ²)	인구밀도 (사람/km ²)
1	오클랜드	1,534,700	1,086	1,413.20
2	웰링턴	412,500	444	929.1
3	크라이스트 처치	396,700	608	652.5
4	해밀턴	235,900	877	269
5	타우랑가	137,900	178	774.7
6	네이피어 - 헤이스팅스	133,000	375	354.7
7	더니든	120,200	255	471.4
8	파머 스톤 노스	85,300	178	479.2
9	넬슨	66,700	146	456.8
10	로토루아	58,800	89	660.7
11	황가 레이	57,700	133	433.8
12	뉴 플리머스	57,500	112	513.4
13	인버 카길	50,800	123	413
14	황가 누이	40,300	105	383.8
15	기스본	36,600	85	430.6
계		3,424,600	4,794	714.35

자료 : 위키피디아

오클랜드(Auckland markets)²⁾

01_마켓의 형성

뉴질랜드에서는 토요시장 또는 선데이마켓이라 하여 각 지역별로 빈 공터나 공용 주차장 등을 이용하여 지정한 요일에 마켓을 열고 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대형 마트만 있었지만 전문가 및 활동가들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crafternoon tea market, Annamaria Berek Orewa Market 등 많은 시장들이 뉴질랜드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림 1] 뉴질랜드 지도



자료 : <http://blog.daum.net/ojkhorn>

1) <https://ko.wikipedia.org/wiki/뉴질랜드>, 위키피디아, List of cities in New Zealand

2)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67131
<http://www.aucklandmarkets.co.nz/>
<https://www.newzealand.com/kr/auckland/>
<http://www.aucklandmarkets.co.nz/>

02_마켓의 주요 판매품

마켓의 주요 판매 품목은 유기농 농산물, 잼, 꿀, 빵, 중고물품 등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개념으로 공예품 등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파머스 마켓에서는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의 직거래는 물론 현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어 볼 수도 있다.

03_마켓의 특성

오uckland 마켓은 교외, 농촌, 그리고 더 작은 지역까지 오uckland 전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판대 5개의 작은 규모부터 가판대 200개의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야채를 재배하고, 공예, 페인트, 요리, 보석 등을 만들고 커피를 마시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장이 50여 개 이상 있다.

뉴질랜드는 재활용이 활성화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벼룩시장과 같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많다. 또한, 수공예품이 많아 예술 공예 시장이 발달했는데, 제품을 만든 장인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기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수제 음식 등을 먹을 수 있으며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농산품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다. 뉴질랜드의 시장은 지역민과 예술인의 만남의 장이며, 뉴질랜드 문화의 한 부분이며, 뉴질랜드의 생활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04_시장 매니저

Crafternoon Tea 마켓의 시장 매니저

Crafternoon Tea 마켓 매니저는 처음에는 가판대 상인이었다가 현재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이 마켓은 2009년 9월 오픈되었고, 2011년 3월, 매니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능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 매니저는, 좋은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고객과 상품판매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시장 매니저의 경우 시각적으로 상품 디스플레이에 경험이 많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품화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 주변의 양호한 도보 및 교통 흐름 체계를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 및 정리된 시장 홀을 유지하며,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Annamaria Berek Orewa 마켓의 시장 매니저

Annamaria Berek Orewa 마켓 매니저도 오레와 마켓의 상인이었다가 시장 관리자가 된 경우이다. 시장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장이 철거되고 신축되어진 공간에서 뉴질랜드 공예품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시장을 특화하기 위해 라이브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시장으로 기획하여 댄서, 댄서, 홀라 댄서, 독특한 악기 밴드, 광대 등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무대를 조성하였다. 고객과 구매자 간의 대화를 중시하고 활기차고 화려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비즈니스 단체와 의사소통부터 장소,

언론, 협의회 규칙 및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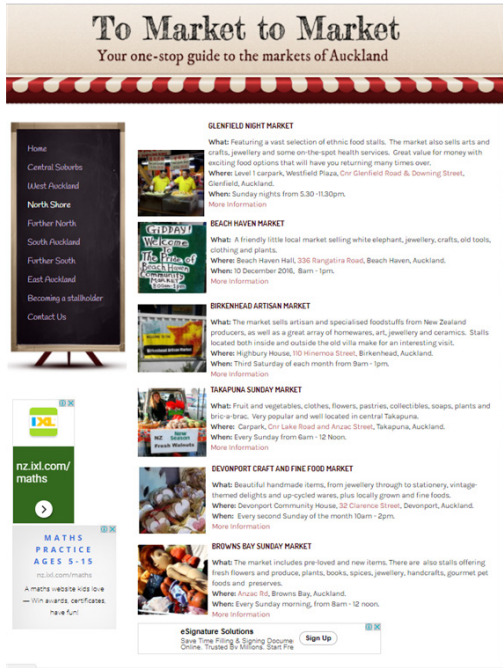
Sarah Mc.Leod, Devonport Craft 마켓의 시장 매니저

Sarah Thorne(Parnell Farmers Market & Craft Harvest Market Manager)는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 시장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데본 포트 크래프트 마켓을 설립하였다. 시장에서 상인으로 2개월간 활동 한 후 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두 명의 매니저였다가 현재 Sarah 단독 매니저로 운영 중이다. 시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오uckland 데본포트에 수공예품 시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많은 열정 및 시간과 돈을 시장 마케팅에 투자하고 좋은 판매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웃고 있는 판매자의 얼굴을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고, 판매자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보유 하고 있었다.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고객 유치의 성공 요인으로 보였다.

05_오uckland 마켓 현황

오uckland는 Central Suburbs, West Auckland, North Shore, Further North, South Auckland, Further South, East Auckland로 구분되어 진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마켓 오픈 변동사항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uckland에 조성되어 있는 토요마켓 및 일요마켓의 구역별 이름과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홈페이지 관리 운영 (<http://www.aucklandmarkets.co.nz/>)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Matakana Farmers Market)-
“Zero Waste Matakana”³⁾

01_마카타나 마을 소개

마타카나는 뉴질랜드 북쪽의 Rodney District에 있는 작은 마을로 많은 포도농장과 파머스 마켓으로 유명한 마을이며 오클랜드 중심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마타카나는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과 마타카나 마켓이 열리고, 매년 마카타나 학교의 Gala 축제 (수천명이 모이는 매우 큰 축제), Music Mountain Matakana 여름철 음악 행사와 11월 Seagull Raft 경주 대회(영국 Seagull 지원)가 개최되고 있다.

파머스 마켓 주변으로 마타카나 마켓이 매주 토요일 9시~14시에 공예품 중심으로 열리며, 마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게라지 세일(community garage sale)이 토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평일에는 조용하다가 토요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북적거리는 마을로 변모한다.

[그림 3]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위치도(구글지도)



3) <http://matakanavillage.co.nz/>
<https://www.eventfinda.co.nz/2017/matakana-village-farmers-market/auckland/matakana>
<http://junctionmag.co.nz/the-future-is-zero/>
<https://en.wikipedia.org/wiki/Matakana>

[그림 4] 마타카나 마을에서 토요일 마다 community garage sale(방문 촬영)



02_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오클랜드에 위치한 마타카나 마켓은 오클랜드 중심지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으나, 오클랜드 북부의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지로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이다.(시장 관리자 : Fiona McGeough, markets@matakanavillage.co.nz, 021-0225-5828)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품목

마타카나 마켓에서는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 과일, 야채, 맛있는 장인 제빵, 이탈리아 소시지, 유기농 초콜렛, 잼, 치즈, 와인, 주스, 수제케익, 꽃, 직접 구운 과자, 고급 와인, 올리브 오일 등과 뉴질랜드 대표 특산물인 마누카 꿀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조리된 음식과 브런치, 고품질의 고기와 현지 수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은 신선한 식품과 장인들의 수공예품으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시장 조성 및 변천 과정

마타카나 빌리지 파머스 마켓은 2004년 조성되었으며, 레인보우 밸리 농장 노점상인 Trish Allen과 Joe Polaischer가 쓰레기 제로에 대한 운동을 시작하여 모든 쓰레기를 농장으로 보내고, 퇴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Trish Allen과 Joe Polaischer가 상인을 그만두고 시장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면서 옥수수껍, 대나무 접시, 냅킨 등이 사용되었고 쓰레기 제로 정신도 사라졌다. 그러던 중 피오나가 시장 매니저로 오면서 다시 쓰레기 제로 시장을 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공식적인 쓰레기 제로 이벤트를 시도하여 쓰레기의 9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특성(마타카나 시장은 쓰레기 제로 시장 목표)

수상 경력이 있는 바리스타 커피, 다양한 브런치 요리 등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고 강을 끼고 있는 경치로 파머스 마켓은 주말 방문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고 있었다. 라이브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을 매우 활기 넘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마을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기 위한 유기농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쓰레기 제로 시장 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시장매니저의 역할

시장매니저는 예전 시장에서 시도 되었던 ‘쓰레기 제로’ 정신을 다시 추진하고 있었고, ‘쓰레기 제로 이벤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시도하여 시장 내 쓰레기의 90%를 감축시켰다. 마타카나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 250km 떨어진 Tuakau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 문제가 수반되기에 쓰레기 제로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시장 매니저는 이를 위해 레드 비치 비즈니스 퇴비사와 연계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현재 시장에는 쓰레기 줄이기 기금 15,000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제로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보여주는 교육용 쓰레기 쇼 프로그램,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03_마타카나 마켓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마타카나 마켓은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과 다르게 수공업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이다.

[그림 6] 마타카나 마켓 페이스북 홍보용 사진



자료 : <https://www.facebook.com/MatakanaMarket/>



[그림 5] 마타카나 파머스 마켓(방문 촬영)

[그림 7] 마타카나 마켓 모습(방문 촬영)



오클랜드 나이트마켓⁴⁾

01_개요

뉴질랜드는 야식문화나 배달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트마켓을 통해 야식문화와 다문화음식을 접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 지역에 7개, 해밀턴 지역에 2개를 포함하여 전체 9개의 나이트마켓이 운영 중에 있다. 야시장은 월요일을 제외 한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되고 대부분 쇼핑몰 주차장에서 열린다. 나이트마켓은 오후 5시(5시 30분)에서 밤 11시(12시)까지 운영 된다.

02_조성 과정 및 특성

뉴질랜드 야시장의 시작은 2010년 Pakuranga에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정기시장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클랜드는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야시장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경험 할 수 있고,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엄격하게 식품허가를 시행하고 있기에 식품 노점은 위생과 안전한 음식이 보장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클랜드 지방 의회의 위원회에 식품관리 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음식 판매의 경우 허가가 매우 까다로우나 그 외 공예품 및 일반 상품 판매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허가가 쉽고 매대 임대비용도 저렴하다.

03_규정 및 규칙

매대의 크기는 2.5m×4m로 차량 주차 공간과 동일하며, 식품 매대는 식품관리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최소 계약기간은 없지만 야시장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매대가격은 푸드 매대의 경우 100달러부터 250달러로 비교적 비싼 편이며, 일반 매대의 경우 30달러에서 80달러로 푸드 매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야시장 구분		일반 매대 가격	푸드 매대 가격
화요일	(오클랜드)Mt Wellington – Countdown 대형마트 주차장	\$30(24,000원)부터	\$100(80,000원)부터
수요일	(오클랜드)Botany – Hoyts 센터 주차장	\$40(32,000원)부터	\$120(96,000원)부터
목요일	(오클랜드)Henderson – Kmart 대형마트 주차장	\$40(32,000원)부터	\$180(144,000원)부터
금요일	(오클랜드)Paptatoetoe – Kmart 대형마트 주차장	\$50(40,000원)부터	\$250(200,000원)부터
	(해밀턴)The Base(쇼핑센터) 주차장	\$80(64,000원)	\$120(96,000원)부터
토요일	(오클랜드)Pakuranga – Warehouse(쇼핑센터) 주차장	\$50(40,000원)부터	\$250(200,000원)부터
	(해밀턴)Kmart Bryce Street	\$30(24,000원)부터	\$180(144,000원)부터
일요일	(오클랜드)Glenfield – Countdown 대형마트 주차장	\$40(32,000원)부터	\$200(160,000원)부터
	(오클랜드)Sylvia Park – PK Furniture 주차장	\$80(64,000원)	\$100(80,000원)부터

[표 2] 나이트마켓 장소 및 가격

※ \$는 뉴질랜드 달러이며 괄호안의 금액은 800원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대 사용자 규칙

- 알코올, 담배, 약품의 판매 및 소비를 엄격히 금함
- 불법, 위조, 위조, 도난 등의 행위는 판매를 금함
-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리 지르고 시설을 파괴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
- 직원은 항상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고 준수
- 매대를 설치하기 전에 대여/공간 요금을 지불해야 함
- 스태프는 자신의 재량으로 매대 진입과 해체를 거부할 수 있음
- 매대 주인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함
- 모든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함

판매품목

주요 품목은 다양한 이민자들에 의한 타문화 음식이고,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장난감, 의류, 수공예품,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오클랜드는 밤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 상가 및 음식점의 경우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쇼핑몰과 연계된 공간에서 열리는 나이트마켓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음식 매대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매대 허가 규칙이 까다로우면서 높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공예품 및 일반 판매 매대는 허가는 쉬우나 수익률이 높지 않다.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매대도 있다.



[그림 8] 나이트마켓 홈페이지

4) <http://aucklandnightmarkets.co.nz/>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구 빅토리아 파크 마켓) - 도시재생 성공사례⁵⁾

01_개요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는 오클랜드 도심까지 약 8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 접근성 및 인접지역의 관광객 및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다.

시설 및 판매품목

현재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구 빅토리아 파크 마켓)에는 갤러리, 워크숍, 스튜디오, 사무실, 식당 및 소매점, 체육관,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예술과 공예품, 기념품, 패션, 가정용품, 보석 및 갤러리, 선물, 스포츠웨어뿐 만 아니라 오클랜드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입점 되어 있다.

5) <http://media.newzealand.com/ko-kr/story-ideas/quick-new-zealand-facts/>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Victoria_Park_Market
<http://victoriaparkmarket.co.nz/>
오클랜드 시의회, Heritage 뉴질랜드, Wikipedia. 현장 방문

조성 및 변천과정

건물의 부지는 원래 Freemans Bay의 일부였다. Freemans Bay는 1870년대 후반에 매립되어 다양한 상업 및 주거용 건물들이 해안 주변으로 조성되었다. 1905년~1918년 오클랜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벽돌 공장 건물(38m 높이의 굴뚝 포함)이 건설되었는데, 1960년대까지 폐기물 저장소와 소각장으로 사용되다가 1972년에 폐쇄되어 건물은 개인 세입자들에게 임대되었다.

[그림 10] 건물 2층 연결통로의 핸드페인팅 거리(방문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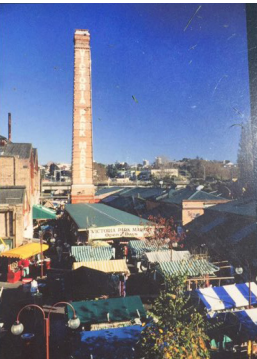


오클랜드 시의회는 복합 단지를 철거 할 계획이었지만 공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장 및 소매 단지로 개조되었으며, 1983년과 1990년에 현재의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1984년 Victoria Park Market Ltd가 단지를 구입하여 2010년 이 복합단지는 소매 상가로 재개발 되었다. 1983년부터 상가로 운영된 빅토리아 파크 마켓은 현재 역사적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 40개가 넘는 상점, 카페 및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02_특성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에서는 뉴질랜드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984년 유명한 핸드페인팅 거리가 조성되어 Edmund Hillary 경 , Dame Kiri Te Kanawa 경 , Billy T James 경 , John Walker 경 , Rachel Hunter 경을 비롯한 뉴질랜드 유명인들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볼 수 있다.

2016년 4월까지 공예품, 기념품, 의류시장 등이 입점 된 소매 단지였다가 2017년 3월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로 이름이 변경되어 2017년 6월 주말 시장이 다시 열렸다. 새로 재개발된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 건물과 구역은 고급 시장 및 세련된 유적지에 있는 소매점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선물, 기념품 및 뷰티 스토어에서부터 카페, 레스토랑 및 바가 입점 되어 세련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형 마을로 변모되었다. 오클랜드의 상징적 유적지인 큰 벽돌 굴뚝이 있으며, 건물 가운데 캐노피가 있어 방문객에게 좋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초기 빅토리아파크 마켓 모습
(빅토리아파크 입구 전시 사진
방문 촬영)

[그림 12] 빅토리아 파크 빌리지 전경·내부 및 상가 사무실(방문 촬영)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지역 비즈니스 단체와 의사소통부터 장소, 언론, 협의회 규칙 및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고,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이 고객 유치의 성공 요인으로 보였다.

04_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마켓 오픈 변동사항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장마다 시장 매지너 활동을 통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 의회에서 엄격하게 식품 허가를 시행하고 있어 식품 노점은 위생과 안전한 음식이 보장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허가는 오클랜드 지방 의회의 위원회에 식품관리 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05_시장 매니저에 의한 운영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와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은 브랜드화 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시사점

01_문화와 생활을 즐기고 볼 수 있는 마켓으로 활성화

약 10년 전만 해도 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대형마트에 의존했던 뉴질랜드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오클랜드는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많기에 야시장을 통해 다른 문화 음식을 경험하고 음악과 공연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02_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의 수제음식, 수공예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뉴질랜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토요마켓 및 선데이마켓에서 수공예품 및 벼룩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며, 친환경 유기농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과 수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어있다. 시장은 뉴질랜드 문화의 한 부분으로 뉴질랜드 생활의 한 면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장소이며, 뉴질랜드 공예품 및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지금 뉴질랜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03_시장 특화 및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 노력

‘쓰레기 제로’시장 조성 및 시장 주변의 양호한 도보 및 교통 흐름 체계를 정비, 깨끗한 환경 및 정리된 시장 홀을 유지하며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 음악

해외리포트2

스페인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사례와 충남의 시사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스페인 몬드라곤과 빌바오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에서 지역중심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형 국가(Reogional State)이로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지방조서권의 세율결정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의 맥락에서도 스페인은 바스크, 까탈루니아 등 지역 중심의 자치권과 시민중심의 특성이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0년 사회적 경제촉진을 위한 국립연구소(INFES) 창립을 계기로 정책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97년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전부터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던 협동조합을 공식적인 정책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진흥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1년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인의 바스크지방은 스페인에서도 분리독립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역이었으며 근대이전부터 철강중심의 생산자 길드가 융성했던 곳이며 이러한 전통은 1870년대부터 소비자 및 생산자 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이 활동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아라사테)는 2016년 기준 28,013명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이지만 협동조합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연간 5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몬드라곤에 인접한 빌바오는 바스크지방 비스카야주의 주도(州都)로 과거 철강산업 도시의 쇠락한 이미지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문화적 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회자된 도시이기도 하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01_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성장과 현황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43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티 신부가 설립한 기술전문 학교를 통해 배출된 5명의 인재가 1956년 설립한 울고(Ulgo)를 시발점으로 보고있다. 이후 아라사테, 코프레스, 에델란, 파고르 등의 관련 기계 설비, 전기회사 등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는 등 영역과 규모를 확장해갔다. 1959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를 비롯해 1967년 몬드라곤 사회보장 협동조합 라군아로(Lagun-Aro), 1968년 도소매 유통전문조직인 에로스키(Eroski)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다.

이후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98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전 세계로 사업대상을 확장하여 해외진출을 본격화 하였다. 이에 199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와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자 협동조합들의 조직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1991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가 탄생하게 되었다. MCC의 탄생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에 대해 각 영역을 구분하여 파고르와 같은 제조업의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 및 사회보장)영역, 유통영역, 연구개발(교육 및 지식)영역으로 재편하는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협동조합이 사회복지 및 취약계층 고용의 분배적 측면의 대안경제활동에서 나아가 전기전자 등 기술집약적 사업에서도 전 세계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규모적 측면에서도 2017년 기준 73,656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7개 국가 140개 회사에 12,000명이 넘는 해외 노동자가 몬드라곤 그룹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총매출액(Total Revenue)은 2016년말 기준 12,035백만 유로이며 2014년 이후 12,000백만 유로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협동조합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들의 운영 시스템과 생존방식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02_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본부(Headquarter of Mondragon Corporation)

몬드라곤 본부(Headquarter of Mondragon Corporation)는 1990년대 설립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에서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MCC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그룹명을 변화한 이후 몬드라곤 내 협동조합들이 4개 사업 부문에 따라 이들간에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협력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에서 매년 연말마다 수익이 발생하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의 배분원칙에 따라 이윤의 10%는 교육부분 투자, 60%는 협동조합 유보금, 30%는 노동자들에게 이윤을 배당한다. 임금이나 이윤배당은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는 최소규모의 급여 차이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과거에는 1:3정도의 차이를 두었

으나, 현재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1:6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스페인의 일반기업은 70배까지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임금을 살펴보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최저임금(세전)은 연간 1만 유로 정도이며 평균임금은 28,000유로이다. 이는 스페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6,500 유로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기업 및 협동조합들은 현재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에서 제시하는 공통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관리하여 협동조합간 연대와 조율의 역할 기능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몬드라곤은 협동조합내 2차 그룹(협동조합들간 연대체)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에서는 이들 2차 그룹의 1년간 수익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고 그룹간의 손익을 계산하여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손해를 본 그룹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후 집단별 순이익의 14%는 몬드라곤 본부를 위해 사용되는데 10%는 신사업개발에 활용되며 2%는 비영리기관지원(학교, 대학, 병원 등), 2%는 위기상황에 처한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일반 기업(조직)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이익금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입이 승인되며, 이외에도 기업 출자금에 대한 합의, 협동조합 간 임금 연대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매달 모든 협동조합들은 실적 및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몬드라곤 협동조합 본부로 보내서 본부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03_싸이올란(SAIOLAN)

싸이올란은 1985년부터 협동조합과 혁신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로 활동하며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몬드라곤 제휴사업단(Consortium)의 신규부문 중 하나로 고급(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신규 기업체 창업 지원이 주요한 목적이다. 싸이올란은 바스크 지역의 주요 주체들에 의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된 기관이다(바스크 주정부, 기푸츠코아 도정부, 몬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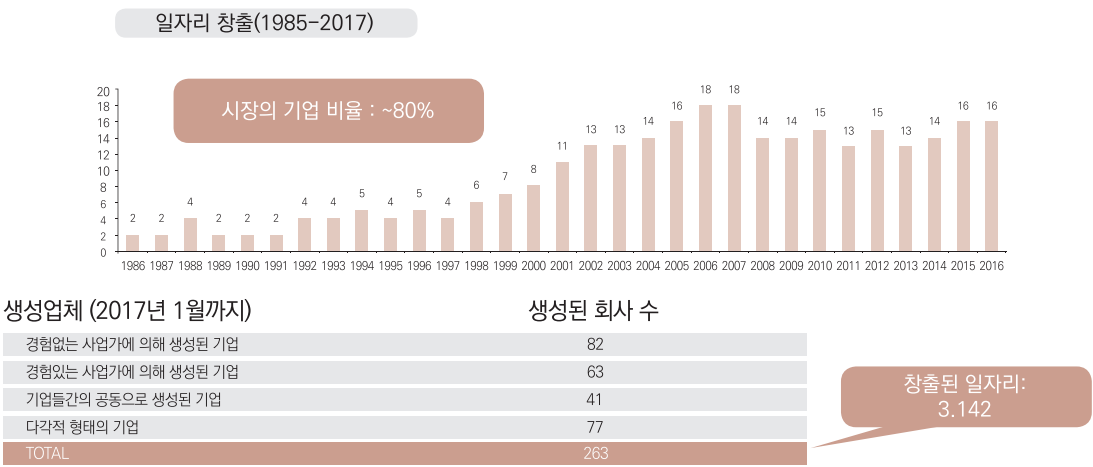
곤 시정부, 몬드라곤 대학교, IKELAN 연구소, 바스크협동조합협회, ULMA 등).

싸이올란의 의미를 살펴보면, 올란(Olan)은 노동, 싸이(Sai)는 경험을 통한 시도를 의미하는데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발하는 몬드라곤 졸업생의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당시 목적은 다양한 청년 사업아이디어의 실현,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현실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 볼 수 있다. 탄생 배경은 몬드라곤의 금융 및 창업관련 중추 역할을 수행하던 까아라보랄(Caja Laboral)이 스페인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라 종전의 기능이 축소되어 금융권 업무만 담당하게 되면서 까야 라보랄 역할 중에서 창업, 산업분야 진흥, 정보제공 등의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요청되면서 Saiolan이 설립되었다.

실제 싸이올란 교육과정을 통해 몬드라곤 지역에서 기존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협동조합이 창업되고 있으며 이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자산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ULMA계열사인 폴리머콘크리트가 있음). 싸이올란의 운영은 주로 바스크 주정부 경제국과 지역의 기업들 및 몬드라곤 사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며 지역중심의 기업체들과 별도로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싸이올란은 최초 몬드라곤 학생들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이후에는 조직차원에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독립되어 있으며 전체 정규직원 8명 중 4명은 몬드라곤 대학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싸이올란에서 근무하는 8명의 직원들은 조직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며, 각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컨설턴트 이외에도 몬드라곤 대학의 졸업생 및 교수진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싸이올란은 몬드라곤 대학 학생이 졸업전에 취업과 몬드라곤

싸이올란의 기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공공기관 방문
사이올란



협동조합을 포함한 주변 지역 기업의 구인수요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이올란에 참여하여 탄생한 혁신기업은 210여 개에 이르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도 3,100여 개에 달하여 몬드라곤 지역에서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사이올란의 컨설팅 업무는 개인,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의뢰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의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현실화가 주로 컨설팅 서비스로 수행되지만, 파고르 등 다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의뢰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푸스코어 주 내부의 기업으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전 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몬드라곤 및 바스크지방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04_몬드라곤 대학교(Mondragon University)

몬드라곤의 설립자인 호세 마리아 신부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설립 초창기인 1940년대부터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을 강조하였고 제자들도 1990년대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교육에 관심을 보여왔다. 1990년대 이후 법제도의 변화에 의해 지역에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몬드라곤 협동조합 차원에서 대학설립을 논의하게 되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속의 민간 사립대학교인 몬드라곤 대학교는 7년여간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내 설립 준비를 거쳐 1997년 5월 30일 「바스크자치공동체법」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몬드라곤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이지만 영리목적의 대학은 아니며 폴리테크닉대학, 비즈니스대학, 인문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2011년 요리대학이 추가 설립되어 4개 단과대학과 5개의 학과로 구성된다. 몬드라곤 대학교는 학부학생 3,400여 명, 대학원생 844명이며 교수는 386명, 직원은 600여 명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 대학교의 재정은 주정부지원(13%), 학생수업료(34%), 프로젝트수주(23%), 교육수입(30%)으로 구성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몬드라곤 대학교는 교육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몬드라곤 대학교는 1998년 설립되어 첫째 2,4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으며 당시 교육과정으로 3년 코스의 1단계와 4년 코스의 2단계 과정을 개설되었다. 1998년 설립시기 교육과정은 엔지니어링 학부, 경영학부, 인문학부의 3학부로 시작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엔지니어링 학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이 세분화되지만 인문학부는 세분화된 전공에서 기업인간학과의 통합되는 시스템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강의의 절반 이상은 바스크어로 진행되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하였다. 2000년 이후 인터넷 관련 학과들이 형성되었고 금융경영 및 정보기술관련 과목이 강화 되었고 2002년 총 23개의 대학원 수강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02년 총 학생수가 3,5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학부보다 대학원 학생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인터넷 및 정보기술이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이켈란(IKELLAN)연구소를 비롯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구소와 공동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몬드라곤 지역에서 확장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확장을 위해 타 국가의 대학들과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 프랑스 대학들과 공동학위 수여를 도입하였으며 핀란드 대학에서 MTA과정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몬드라곤 대학교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

첫째는 사회적 사명이다. 몬드라곤 대학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소속된 대학으로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학의 사회참여를 사회적 사명으로 제시한다.

몬드라곤 대학교 방문



둘째는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몬드라곤 대학에서 강의 프로그램은 소속된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학업과 노동현장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며바스크 지방의 시장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을 지니고 있다.

셋째는 학생들의 현장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몬드라곤 대학교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의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자비로 학비충당이 가능하다. 특히 경영학부 학생들은 일주일 중에서 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2일은 기업현장으로 나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기업 두 곳에 지도교수가 존재하여 학교와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각각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비롯한 기업들은 몬드라곤 대학교 교수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졸업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고 있다.

빌바오 사회혁신의 사례

01_빌바오의 도시재생과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는 수백년간 질 좋은 빈철이 생산되는 유명한 철광지역이며 동시에 지리적 위치상 영국과 프랑스의 교역항로이며 20세기 초 조선산업 발달로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도시였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신흥공업국의 등장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빌바오의 주력산업인 제철과 관련된 조선업 등 중공업이 몰락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당시 인구 30%인 8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철강과 조선산업의 폐기물로 도시 전체가 오염되었고(네르비온 강의 산소량이 0%에 달함)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리버풀 등 유럽의 많은 산업도시들은 빌바오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중 한 방법으로 문화적 방법을 통한 장소마케팅 및 문화도시 전략의 사례들을 많이 활용해왔다. 빌바오도 1980년대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빌바오 도시재생협회(SURBISA)를 설립하고 새로운 도시의 주력산업에 대해 금융, 하이테크, 문화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2년 스페인정부와 바스크정부가 50% 출자하여 설립한 'Bilbao Ria 2000 개발공사'가 빌바오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소가 위치하던 Abandoibarra지구에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공공용지의 개발이나, 철도로 단절된 Rekalde지역 복원을 위해 철길의 지하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및 공원을 조성하였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의 핵심으로 빌바오시는 구겐하임재단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미술관 유치에 성공하였다. 미술관 추진 당시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 도심재생을 위한 문화적 전략을 투자보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한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이를 주변으로 수변공간 개발의 과정을 통해 도심재생을 이루어가겠다는 공공의 의지가 강했고 다양한 주민,

민간조직들과 협력을 통해 민관협력의 과정으로 추진하였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프랭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 랜드마크로 탄생하자 초기의 우려를 뒤엎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개관 첫째 136만 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백만 명이 미술관을 찾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외부의 건축적 효과와 함께 신시가지 및 구시가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변에 다양한 보행교와 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문화예술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02_빌바오 사회혁신센터(BBF)

빌바오 네르비온 강변에 위치한 사회혁신센터(BBF)는 빌바오 시정부가 10년간 무상임대료 제공해 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몬드라곤 대학교와 민간 혁신창출 컨설팅기업인 INIT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빌바오의 사회혁신센터는 몬드라곤 대학교의 팀 아카데미 과정을 비롯해 민간·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혁신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이 집적되어있는 기관이며 주체를 및 기관간 상호협력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물건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빌바오 사회혁신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발전과 혁신을 위한 인재와 기업을 개발, 양성하는 것이며 주로 사회적목적 을 위한 혁신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도와주고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다.

빌바오 사회혁신센터의 공간은 층층이 쌓아올린 파스타 요리를 의미하는 '라자니아'라고 표현되는데, 센터의 구성이 각 층마다 다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1층은 리셉션 장소와 함께 혁신기업가를 꿈꾸는 예비 창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일반 사무실의 10% 내외)에 데스크 및 공간을 임대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관련된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 2층은 몬드라곤 대학교 팀 아카데미 프로그램 공간이 소재하여 몬드라곤 학생들의 현장실습공간이면서 1층에서 예비 창업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시작한 Start-up기업들이 상주해 있다. 3층은 2층의 Start-up기업들 중에서 3년이상이 지나고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진입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3층 공간의 임대료는 빌바오 시내 빌딩 임대료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라 한다.

BBF의 운영비용을 살펴보면 광고료와 함께 3층에 입주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임대료로 충당되며 정부는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다. 1층에는 별도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이벤트홀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들의 시제품 홍보나 런칭 행사를 개최하고 다른 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각 층마다 공간 운영은 분리되어 있지만 매우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상호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사 업종간 프로젝트를 결성하기도 하고 3층의 선배기업이 1층 예비창업자를 위한 시설교육이나 사업 아이템 조언도 하고 있다. 공간을 운영하는 INIT는 기업혁신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TZBZ」라는 기업은 1층 예비 창업자 과정에서 시작해서 현재 3층으로 옮겨 입주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과 창업자 대상 혁신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BBF공간의 2층에는 몬드라곤 대학교의 경영학부에서 운영하는 MTA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MTA프로그램은 본래 1993년 핀란드 유바스칼라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팀아카데미 교육방식을 도입한 것이며 현재 경영대학내 창업준비를 위한 특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MTA는 4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졸업생의 90%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및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만들어진 팀을 통해 창업하게 되며 5%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8명의 팀 코치가 1학년부터 구성된 학생들의 팀을 4학년까지 전담하여 지도하게 된다. 1학년에는 기업가정신, 협동조합, 노동 및 교육의 기본가치를 습득하며 각 팀별로 강의실과 실습실을 사용하며 팀 아카데미 시스템을 학습하게 된다. 팀별 코치 미팅은 1주일에 2번 4시간씩 있으며 8명의 팀 코치 또한 주1회 상호 의견 교환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팀 아카데미에서는 약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보통 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학생이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어 참여하고 있다. 2학년부터는 몇 개월간 유럽, 일본, 미국 등 해외로 프로젝트 관련하여 장기연수를 보내어 경험을 습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창업 및 기업운영을 위한 실행을 강화하게 된다. 4학년에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창업을 유도하며 몬드라곤 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창업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빌바오 사회혁신센터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의 시사점

01_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강조

방문조사내용을 종합하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자본보다 노동에 의한 소유와 가치가 중요함에 대한 인식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간부들이 Sirimi(가랑비)라 표현하는 호세 마리아 신부가 말하는 노동의 가치와 사람중심의 가치전환의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경제적 토양과 사회적 관점을 조성할 것으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기업 당사자들이 노동의 관점과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기업활동에 투영할 수 있도록 주입식 이론교육보다 스스로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 효과 창출을 위해 업종 및 기업이 강조하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02_사회적경제기업 운영방향 제고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초창기를 비롯해 80~90년대 많은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과정이 있으며 극복의 배경으로 노동과 사람에 대한 가치와 연대에 의한 힘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기업 내에서 임금의 격차는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은 기업이 어려울때 극복의 힘이 될 수 있는 가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적립에 의한 금융기금 조성과 같은 미래의 투자가 지속적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사업 이윤에 대해 다른 협동조합들간 이익의 손실보존 및 고용에 대한 연계승계 등의 연대활동은 위기극복의 핵심이자 필수이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지만 협동조합들간 노력에 의한 정확한 차등의 원칙과 구체적이고 기간별 본부 중심의 경영관리는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킨 주요한 방법들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단시간에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다. 몬드라곤과 기푸스코어의 작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뿌리내리고 활동하기 위해서 오랜시간 동안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실제로 초창기 몬드라곤에서 울고 설립까지 13년의 시간동안 가치확산과 인식전환을 위한 ‘씨앗’의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충남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급속한 성장보다는 꾸준히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03_사회적경제의 교육지원사업 방향

오타롤라 및 싸이올란의 교육·컨설팅 체계를 보면, 협동조합 이사회 멤버들, 조합원대상, 신입회원 및 신입기업 대상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해 5년 넘어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사회적경제 개념과 인식확산이 주로 시행된 한계 극복이 필요한 시점이며, 목적과 수요자의 구체적 대상이 분명한 협동조합 교육체계 설계가 요구된다.

우선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교육대상자들도 고객 세분화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의 교

육프로그래미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원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연대 축진을 위한 시스템, 협력적 행위를 개발하는 방법, 조직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등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조합원 대상으로는 소속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조합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의 강화 및 조합원간 협력문화의 확산 등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정책가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대상으로도 협동조합 문화확산과 협동조합간 협력활동 강화와 일반기업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습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진단을 통한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오타로라에서 수행하는 바처럼 조직문화진단, 리더쉽 평가처럼 단순한 지식 제공만이 아니라 조직들의 세밀한 진단조사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도입이 중요하다.

04_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방향의 제시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과 공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창업보육공간의 설치와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업을 위한 과정들을 기업들과 함께 수행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의 창업보육보다 싸이올란과 같이 창업시장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튜더(Tudor)제 운영 방식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볼만 하다. 튜더제 운영을 위해서는 싸이올란의 사례처럼 충남도 내의 다양한 대학과 전문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이다. 도 내의 다양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수요와 보유기술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시장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이나 보육센터가 특정 대학 내 소속기관이 되기 보다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위해 싸이올란이나 빌바오 BBF의 사례처럼 공공지원과 창업보육을 요구하는 기업 및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분리된 조직으로 설립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싸이올란의 창업지원은 바스크지방이나 스페인에 국한되지 않고 바스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서비스 또한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적합한 분야의 지역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유인하는 사업도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지역에 수요가 있거나 블루오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의향이 있는 해외기업의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남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와 합작을 통한 사업진출을 모색하게 하는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05_지역의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마련과 공간구축

빌바오는 도시내 유휴공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지방도시 중심의 유휴공간의 재활용을 통해 도시활력을 위한 공간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바오의 사례를 바탕으로 ‘빌바오리아2000’의 형태와 같은 관련된 민간협치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민간협치 관련 조직과

함께 유휴공간의 관련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유휴공간의 활용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심의 유휴공간은 접근성과 상권이 좋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지역의 사회적변화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을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천안·아산 등 도시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 의 특성상 도심지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영차원에서 사회혁신센터는 빌바오 BBF의 사례처럼 공공이 공간만을 제공해주고 충청남도의 사회혁신기업이나 관련 당사자협의체 등 민간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유연성과 자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혁신센터의 운영방법 또한 예비창업자부터 스타트업 기업 및 활동 중인 사회혁신기업까지 다양한 단계와 형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창출의 공간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상생과협력1

이웃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마을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축 운동을 제안한다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책임간사

한국사회, 갈등사회

한국은 OECD 34개 국가 중 갈등지수 5위이고, 갈등관리 능력은 27위에 머문다. 인구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사건을 들고 법원으로 가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 데,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 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현실은 사회전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공동체 약화가 가져온 이웃 분쟁의 증폭

최근 아파트와 연립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도 잦다. 부실한 건축도 문제이겠지만 많은 세대가 밀집해 사는 공동주택의 구조가 층간소음 외에도 누수, 주차 시비, 냄새, 애완동물 사육, 흡연, 에어컨 실외기소음, 관리비 등 이웃 간 부딪힐 일이 많은 것이 이웃분쟁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다.

개인 간의 문제 외에도, 혐오기피시설, 공사 소음, 조망권분쟁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 주민과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웃 간,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대화나 협의, 조정 등 이해와 배려의 바탕 아래 주민자율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레 협동 정신이나 이웃 간 지혜를 모아 마을의 갈등을 해결해 온 공동체 전통이 약화되고, 아파트의 ‘칸막이’같은 이웃 단절과 소외가 보편화된 것이 그 이유다. 주민들이 풀뿌리 삶의 현장에서 해소하지 못한 크고 작은 분쟁의 잔재는 결국, 지역사회와 국가적 분쟁과도 이어지기에 이웃분쟁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공공갈등 해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안적분쟁해결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위의 맥락에서 한국사회를 갈등사회로 진단하고, 갈등사안을 ‘시민의 자발적 화해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민사회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서울YMCA는 1978년 시민중계실(Civil Mediation Center)을 개설했고, 시민자구운동 및 소비자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

민중계 운동을 추구해 오다가 2012년 비로소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시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상담하고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풀어내는 대안적분쟁해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아파트도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빌라는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지붕에 많은 이웃이 벽을 나누어 사는 아주 밀착된 공간이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 부딪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접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참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다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거나 경찰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격한 감정에 직접 올라가 대화를 하려다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간에 완충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구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데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사이 이웃과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만다. 이런 분쟁의 경우 아파트 외부의 사람들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악화할 뿐이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사안은 결국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어려워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해결하거나, 애초에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에 주민자율조정기구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웃을 잊어버렸고, 한국사회의 미덕인 신뢰와 협동, 배려가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잃고 말았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왕성할 때 ‘충돌을 예방 완충해주는 신뢰’와 위아래로 엮히고 설킨 갈등(葛藤)의 실타래를 쉽게 끊어 버리지 않고 풀어나 보다 성숙한 ‘생활문화를 창출하는 지혜’를 상실한 것이다.

잃어버린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것만이 층간소음과 이웃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곤 할 수 없다. 아파트가 투명하고 활기 있게 될 수 있도록 주택법도 정비해야 함은 물론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고, 공동주택 건축 기준은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갈등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심리적 돌봄과 상담 활동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고, 이웃 간 신뢰와 지혜를 회복해 ‘주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민자율조정’ 활동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과의 협력을 통해, 2013년 3월 은평뉴

타운 제각말 5단지(330세대, 진관동 소재)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마을의 주민자율조정위원들은 ‘주민자율협약’ 안을 만들고 발로 뛰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어 주민자율협약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갈등 사례 교육, 조정실습,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민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의 섬기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 당시 26명의 제각말 5단지 YMCA 주민자율조정위원들은 ‘이웃사랑해’ 라는 이름으로 주민조정 활동을 했으며, 이 외 인사하기 캠페인, 소통게시판을 통한 아랫집에 편지쓰기, 나무심기봉사, 도서관지기, 베틀 시장활동, 재능기부 강좌 등 마을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평화의 일꾼(Peace Maker)들이다.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서울시는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평구 갈현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192세대)와 갈현e편한세상 아파트(190세대), 응암 백련산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외, 25개 자치구에 1개씩 총 25개의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조직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별히 은평구 갈현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주민자율조정위원들은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7년 서울시 갈현1동주민센터 내 마을계획단 활동에 합류했다. 그 후 ‘주민 갈등해소 모임인 이웃사이다분과’를 만들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어르신자서전쓰기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에 힘쓰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을 줄임은 물론, 커지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

서울시 성동구의 특별한 실험 - 왕십리2동 주민자율조정센터 개소

이렇듯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율조정이 교육과 풀뿌리 기구 구성을 통한 주민리더 양성 운동은 꾸준히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아파트 경계를 넘어서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비롯해 마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교회, 대형마트나 시장 등 주민생활에 기반을 둔 시설들에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율상담조정센터’ 구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는 주민의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에 평소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에 관심을 표명해 오던 성동구(정원오구청장)의 「왕십리2동주민센터」와 서울YMCA(이석하 회장)의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2017년 협약을 통해 주민리더들을 마을 화해소통전문가로 훈련하는 ‘마을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이는 아파트 내의 이웃분쟁을 넘어 동 단위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즉, 캣맘, 쓰레기투기, 마을버스노선변경, 아파트 간 우회로 개방문제 등 다양한 마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왕십리2동주민센터 내에 왕2동 공감지기라는 주민모임이 형성되었고, 훈련된 주민들의 활동을 위한 행정의 배려로서 지난 2017년 9월 「왕십리2동주민센터 내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가 개소하게 되었다.

이웃분쟁 해소, 동주민센터 주민자율조정기구를 통하여

성동구는 이를 계기로 성동구 17개 전동에 ‘풀뿌리 마을 주민자율조정센터’를 YMCA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민갈등 예방과 이웃분쟁 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 내 6개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했다. 이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에 주민조정가를 양성하고 ‘주민, 관, 민간’이 협치해서 마을분쟁을 예방, 해소하는 운동이다. 성동구는 2018년 하반기에 남은 10개 동에도 이 교육을 확대시행하고, 각동에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를 구성할 계획에 있다.

지난 과정을 통해 사근동(9.27~11.22), 금호2·3가동(9.27~11.22), 왕십리도선동(9.27~11.23), 응봉동(10.12~11.30), 성수2가제3동(10.13~12.1), 금호1가동(10.16~12.4) 마다 40여 명의 주민리더들이 교육을 받았다. 총 6개동에서 240여 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6회 이상 참석자 대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동별로 1명씩 우수학생 표창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성동구청 3층 강당에서 129명의 ‘성동구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들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각 동별로 교육 당시 느낀바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각동의 주민조정가(Peace Maker이자 지역사회 그물망위원)들이 한데 뭉치는 ‘성동구 주민자율조정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각 동별로 심화교육과 사례 조정실습을 해가면서 동별로 작은 조정과제를 선정해 창의적 분쟁해결을 실험하며 주민 참여형 분쟁해결 사례와 매뉴얼을 만들어 가려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영국의 ‘헐 시티’가 도시비전을 ‘회복적 도시’로 추구하고 활동했던 것과 같이, 성동구를 ‘주민자율 조정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추후에는 이런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 등에 다양한 형태의 ‘마을 주민자율조정센터’가 시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 활동에 힘을 모아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활동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아 한국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마을 주민자율조정센터 구성 및 주민교육 지원 문의

연락처 | 02-732-2941(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이메일 | theway@ymca.or.kr

상생과협력2

제주지역 갈등과
시민의 참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들어가는 말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등의 질문에서 항상 앞선 순위를 놓치지 않는다. 본토와 다른 환경적·문화적 특성에 따른 호기심도 있지만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물이 좋고 등 제주의 뛰어난 환경가치가 손꼽힌다. 관광도시 제주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점에 어느 누구도 반론은 없을 것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과 청정한 자연환경에 큰 만족도를 보였다. 관광객들에게 제주바다의 뛰어난 경치와 한라산과 그 주변에 솟아 오른 오름들이 한 눈에 보이는 중산간 목장지대의 너른 초원의 풍광은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다.

이러한 제주의 환경은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에게는 상품화를 위한 최고의 소유대상이면서 개발 대상이 되었다. 1970년대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제주지역은 줄곧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성행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져갔다. 최근에는 전입인구의 증가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상주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적인 부하가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개발로 인한 제주의 변화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제주가치를 떨어뜨리는 변화라는 우려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제주사람들은 과거부터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유한한 자연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운명적 조건 하에서 제주사람들의 선택은 공유경제의 방식이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목장을 마을공동 소유로 한 마을공동목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의 생산활동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가주도하에

제주개발이 본격화되고 외지인의 투기성 제주도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제주의 농촌 공동체가 급격한 속도로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제주의 바람보다 더 세게 개발바람이 불었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법을 초월하는 규제완화와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다. 개발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자에게 각종 투자혜택과 세제감면 혜택을 주며,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발인 경우도 토지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민 주체의 개발과 지역 1차산업 발전이 소외되고, 지역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지역의 공공갈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제주지역개발로 인한 공공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주개발정책의 변천

제주개발의 논의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사정권 당시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지역개발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주개발의 논의가 시작됐고, 제주도 전역이 개발사업을 위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투자사업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1960년대는 직접적인 개발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계획들은 이후 제주지역의 각종 기반시설 투자계획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는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한 1970년대 들어서였다. 1973년부터 시행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은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한 전국 도 단위 최초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었다. 중문관광단지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획에 의해 공항과 항만이 확장되고, 도로 및 통신시설의 확충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제주개발계획은 1980년대 들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다. 1985년 정부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포괄하는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외지자본의 제주지역 투기바람은 거세졌다. 1988년 9월 내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외지인 토지소유현황에서 외지인 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지역에 50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회사법인은 모두 18명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4.4%인 79.1㎢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89년 9월 제주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제주 지역의 외지인 소유 토지는 248㎢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3.5%에 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지 면적에 대비한다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1990년대는 외지자본의 제주지역 토지잠식과 정부의 하향식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업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제주개발의 부작용과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운동’이었다. 정부는 제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시안이 공개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터져 나왔고, 범도민적인 특별법제정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제주 시내에서는 연일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의 정치적 쟁점사안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결국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날치기통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되었다.

‘관광’주도의 개발로 인해 1차 산업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제주경제는 도외자본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에 종속되어가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외자본에 의한 제주도 내 토지잠식과 투기행태가 눈에 띄게 많아졌지만 이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관광개발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개발주체로 서지도 못할뿐더러 토지도 잃고, 관광소득 이익도 역외유출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의 개발정책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적극 편입되었고, 투자자본의 원만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인 제주도를 건설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지금까지 제주개발에서 지적되어 왔던 도민주체의 개발, 개발이익의 환원과 배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주도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서는 환경문제마저 홀대받는 양상이었다.

: 지역개발의 갈등전개와 양상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시도의 기회가 넓어지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 참여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환경정책의 경우도 기존의 생활 오염원의 관리차원에서 벗어나 주민의 쾌적한 삶의 추구를 위한 질적인 수준의 환경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정제주의 경쟁력은 환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욕구는 공격적이다. 일례로 제주지역이 현재 운영 중인 30개소의 골프장 가운데 2000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19개소에 달한다.

물론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어왔고, 일부는 바람직한 방향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중심축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목표로 획일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주만이 갖는 특성화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골프장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규모 호텔·리조트 건설이 난립하면서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이 넘쳐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삼아 대규모 투자유치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방식만 보더라도 정부와 제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JDC는 주로 제주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발생하면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당연히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토지주인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 규모가 대규모이고, 사업입지 또한 경관이 좋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환경파괴 논란도 뒤따랐다.

서귀포시 해안마을인 예래마을 내 유원지개발사업의 경우는 JDC가 유원지 성격이 배제된 사업구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74만여㎡ 부지에 1,530여실 규모의 휴양콘도와 약 1,000실 규모의 호텔, 카지노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토지수용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이 사업은 영리추구를 위주로 한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은 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섬의 환경적 수용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개발은 관광객 유입확대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로 지역의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12월

말 기준 제주를 찾은 한해 관광객 수는 500만 명이었다. 당시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숫자였지만 10년 후인 2015년에는 860만 명이 늘어난 1,360만 명으로 10년 단위 기준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만 해도 평균 3%대의 완만한 증가율이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1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수도 증가했다. 1995년 제주도 인구는 51만 9천 명이었다. 특별자치도 시행 직전인 2005년에는 55만8천 명으로 1995년 대비 7.5%의 증감률을 보였다. 그러나 10년 후인 2015년 기준 62만4천 명으로 늘어 2005년 대비 12%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관광객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제주의 관광객 및 인구의 급증으로 상주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주지역의 생활환경은 크게 악화되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1일 신규차량 등록대수도 평균 100대를 넘어서면서 전에 없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와 하수의 발생량도 급증하면서 매립장 포화에 따른 대응책이 늦어지면서 쓰레기처리 대란이 발생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는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늘고 있고, 행정의 능력 대응으로 행정과 주민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동안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제시되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대한 발상이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적 성장 중심의 제주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미래비전의 전환과 대안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도는 공감을 표하면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던 관광정책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제주개발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 내 정책결정자들 역시 지역개발의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향에 있어서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제주개발의 현실을 볼 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제주도민들이 요구했던 도민주체의 개발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도민주체의 개발은 단순히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위치

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개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기대효과 역시 지역주민과 연계됨을 말한다. 제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개발로서 그 이익과 영향이 도민사회에 고루 분배되는 지역개발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개발정책 참여도 필요하다. 지역개발정책의 흐름은 결국 지역정치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주민참여가 활발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강화를 통해 개발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제주섬의 환경 수용력을 뛰어넘은 과부하 현상을 막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의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 역시 급격히 증가한 관광객을 포함한 상주인구로 인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확충 등 수용능력을 좀 더 키워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맞출 수도 있다. 하지만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하에서 수용력을 넓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더 큰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고, 지금의 지역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제 개념에 입각하여 관광 및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부터 제주는 환상의 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지금은 제주섬의 미래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공공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개발과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개발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상생방안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1

30-50클럽 가입, 선진국 진입할 호기다

권오덕 前 대전일보 주필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일본이어 7번째, 3만 달러에 걸 맞는 일자리창출·출산율 높여야
헬조선 비하 말고, 코리아 자존심 세울 때다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 연말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난해까
지 2만9745달러였으니 마이너스성장만 하지 않는다면 연내 3만 달러돌파는 그리 어렵지 않을 전
망이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에 오른 후 무려 12년 만에 이루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상 국가의 별칭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케 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선진국에 이은 가입으로 뿌듯하다. 이제 경제력과 인구
를 동시에 갖춘 강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대열에 합류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우리가 12년 만이
지만 이웃 일본은 4년, 독일은 6년 만에 2만 달러대를 졸업했다. GDP총액(2016년)은 미국 중국이
1, 2위이고 일본 독일 영국이 3, 4, 5위이며 한국은 11위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9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 국가는 인구가 적은 소위 강소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1위는 10만5800달러의
룩셈부르크. 제주도 보다 약간 큰 면적에 인구 60만의 소국이다. 2위는 7만9578달러의 스위스로 4
만1천 평방km에 850만 명의 소국이다. 5만7천 달러의 미국이 8위에 올라 초강대국의 면모를 과
시하고 있긴 하다. 20위 안에 독일(18위 4만4500달러)과 캐나다, 호주가 끼어 있는 정도이다.

3위는 7만1천 달러의 노르웨이로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인 32만 평방km이지만 인구는 535만 명에 불
과하다. 소위 30-50클럽멤버인 영국(21위), 프랑스
(22위), 일본(25위), 이탈리아(27위)등도 20위 밖이
다. 그러나 인구나 면적이 아주 작은 강소국들은 상위
권에 많이 포진돼 있다. 마카오(4위) 아일랜드(5위)
카타르(6위) 아이슬란드(7위) 덴마크(9위) 싱가포르

(10위) 산마리노(13위)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케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피식민 지배국가 중
이처럼 급성장한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를 반겨하기보다 앞으로의 과제가
무겁다.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뒤를 쫓는데다 우리의 제반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4만
~5만 달러까지 오르려면 수출 및 내수성장의 균형발전과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헬조선’이란
좋지 않은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 건 크나큰 문제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의 헬(hell)과 조선을 합성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자국비하 성향의 네티즌들이 SNS에 “한국이 지옥에 가
깝고 기득권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라며 만든 인터넷 신조어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이다.

실제로 일부 젊은이들은 이 땅이 싫어 이민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역이민 오는 경우와 대비된다. 사실 취업이 어렵고 삶이 빡빡
하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지구상에 흔치 않다. 해외여행 다녀 온 많은 사
람들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를 증명한다.

최근 미국 투자전문사이트 인베스토피아가 한국으로의 은퇴이민을 권유하는 이유를 보면 자긍심이
들기도 한다.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로 약 20만 달러(2억2500만 원)의 자금만으로도 현대적이고 첨
단기술이 갖춰져 은퇴이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어느 곳보다 빠른 인터넷 연결과 적게 드는
비용, 값싼 포장마차부터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먹을거리 파는 곳이 다양해 살기 좋다는 것이다.

음식 값도 비교적 싼데다 야채 김치 나물 등 반찬을 공짜로 준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노석이 있다. 향
공교통의 중심지여서 중국, 일본, 동남아 각국을 쉽게 오갈 수가 있다. 한국처럼 다양하고 친근한 자
연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해 흥미롭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이기도 하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과 비
교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고 있다. 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동네만이 삶의 척도,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한다. 외모와 간판을 너무 중시한다. 그래서 스펙 쌓기와
성형수술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외국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머리를 흔든다.

젊은이들은 허황된 꿈을 버리고 중소기업이라도 우선 취업해 작은 월세 아파트라도 얻고, 적령기에
결혼하여 자식 낳고 알뜰살뜰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 하루 2달러 이
하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이 70%인 40억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30-50클럽가입을
앞두고 정부는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복지 향상, 획기적인 출산율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2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김지은 아우라 휴먼디자인 컨설팅 대표



인간사에서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본능이고 생존이다.

사람과 송아지의 출생 순간을 비교해보자.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동물보다 섬약하다. 모체 밖으로 나온 송아지는 몇 분이 되지 않아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제 어미를 찾아가 젖을 물며 살아내는 힘을 보여주지만, 사람은 태어난 지 몇 분 만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을 부모 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인간은 출생의 순간부터 누군가와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관태기

‘관태기’란 관계와 권태기가 합쳐진 신조어로, 관계를 맺는 일에 권태로움을 느껴 피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본능적으로 혹은 잘살기 위해, 좀 더 행복하기 위해 맺는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고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부부나 연인들이 권태기를 위기로 인식하듯, 이쯤에서 우리도 더 건실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나와 달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체가 아닌 가성비 좋은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상대를 공감하기 위한 나만의 공간

권태기의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혼이나 이별이 아니듯 관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극단적인 관계의 가지치기가 아니다. 만남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넘길 수 있도록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도감과 포만감을 느끼고, 반면 홀로 있을 때 내면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한발자국 떨어져 사건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미처 알 수 없었던 관계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상처를 회복하기에 내면의 성찰만큼 좋은 약이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그 관계가 왜 고통이 되었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관계의 정의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몇 해 전, 새벽녘 남동생이 거실에 앉아 작은 화분에 꽃씨를 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 피곤할 텐데 안자고 뭐 하나고 물었더니 대꾸도 없이 큼직한 손으로 작은 씨앗을 정성껏 고르고만 있었다. 그 모습에 더 궁금증이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왜 이 새벽에 화분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동생은 마지못해 “식물은 누나처럼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도 대꾸했다. 당시엔 이해가 안 되다며 타박을 했지만, 동생은 자신의 관계에 대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식물을 선택했던 것 같다.

요구 없는 생명체와의 시간을 통해 의무적인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고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 다시 맞닥뜨릴 관계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숫자만큼 역할과 책임감도 함께 늘어간다.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즐거움을 찾아 풀어야 한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크면 푸는 방법도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거나, 폭탄주로 상대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술을 마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즐거움을 일상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숨을 고르며 다시 ‘관태기’를 극복할 힘을 만들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힘을 길러야 한다.

햇살 없는 벚꽃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벚꽃은 짧지만 강렬하다. 그 강렬한 아름다움은 홀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걸 비 오는 날 벚꽃 나무를 보면 알게 된다. 빛 한 점 받지 못한 벚꽃들은 스산할 정도로 쓸쓸해 보인다. 찬란한 햇빛과 꽃들이 맞닿았을 때 눈부시도록 찬연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로 인해 당신이, 그리고 그 상대가 인생의 봄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CHUNGNAM NEWS

충남 소식

2018 SUMMER Vol.83

1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충남 만든다

충남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골든타임 내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은 도와 15개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해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게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을 설정,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위급상황 대처능력 제고, 주민 안전의식 강화,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 등을 목표로,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둔다.

도는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충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13개 협업부서장이 참석한 풍수해 재난대비 토론훈련을 실시했으며, 도와 아산시 주관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또 이번 훈련기간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 청사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 불시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시 도

민행동요령 안내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해 안전한 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천 대응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 충남을 만들어 갈 것”고 말했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대응전략 찾는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따라 전문가 초청 ‘킵오프-미팅’ 개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연계 전략·남북경협 참여 등 논의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킵오프 미팅’을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경험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것으로, △동북아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등 3대벨트(H벨트)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던 지난 2015년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이 구상은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가시화 될 전망이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성장 산업 육성, 관광 사업 활성화, 교통·물류 연계성 확대 등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중심 추진체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기로 하고, 전략 수립을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는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와 성균관대 중국성균연구소

양철 박사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충남의 대응전략’, ‘서해 경제벨트와 남·북·중 산업 협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토론을 갖는 순으로 진행했다.

첫 발제에 나선 홍원표 박사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에너지 시설과 교통 인프라,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충남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중 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의 태안반도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철 박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험의 확장판과 같다”며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충분한 전력 공급에 있는 만큼, 전력망 구축 및 연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는 앞으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편 △자연재해 긴급 구호 및 산림자원 개발 △삼국문화교류 및 평화통일 줄다리기 등 민간 차원의 인도적 사업과 개발협력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문화 교류 사업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CNI NEWS

연구원 소식

2018 SUMMER Vol.83

1

충남연구원,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발간

충남 지역의 문화, 예술, 환경 등 우수한 자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이 기획한 ‘충남 재발견’ 시리즈 세 번째 책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가 나왔다.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로 협동조합과 유기농업을 시작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 신문 창간을 이끈 충남 홍성군의 작은 마을 홍동면은 교육, 협동, 유기농업 등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가 50여 개에 이른다. 저자 이번영은 바로 1958년 홍동면에 ‘풀무학교’의 문을 연다.

이 책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은 풀무학교가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교육’, ‘협동조합’, ‘문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1장 ‘풀무학교와 지역’에서는 풀무학교 설립자 이찬갑과 주옥로가 학교 개교까지의 과정과 풀무학교의 교육 이상을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살핀다. 특히 저자는 풀무학교가 지역을 바꾸어 온 핵심을 무교회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찾았다. 제도와 형식을 배제하고, 진리의 원형을 추구하는 무교회주 신앙의 개혁성이 교육과 사회 개혁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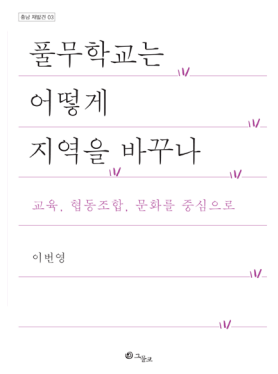
2장 ‘협동조합 마을’에서는 풀무학교 개교 이듬해인 1959년에 문을 연 소비조합 구판장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조합인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탄생까지의 과정, 그리고 1969년 풀무학교에서 창립총회로 시작한 풀무신용협

동조합을 다룬다. 또한 협동조합이 직면한 현실의 과제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제언을 담았다.

3장 ‘앞서가는 문화’에서는 1959년부터 학생들이 만든 교지와 벽보 등 다양한 간행물들을 소개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지역 소식지가 ‘홍성신문’ 창간으로 이어져 온 이야기들을 담았다. 또한 풀무학교에서 1965년 시작한 ‘풀무학원도서조합’이 ‘홍동학생도서실’로 정착하고, 2011년 ‘홍동밤맑도서관’으로 개관하기까지의 독서 운동 과정도 들어있다.

이번영은 “풀무학교는 누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아도 되는 자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직·간접으로 보고 듣고 실천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풀무학교와 홍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영은 홍동에서 태어난 풀무학교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실무와 전국 최초의 지역 신문인 ‘홍성신문’ 창간의 주역으로 홍동 지역 변화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현재는 홍성신문 대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

마을자치규약 특집 다룬 ‘마을독본’ 창간호 나와

농촌 마을 만들기 리더와 활동가를 위한 잡지가 탄생해 눈길을 끈다.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농촌 마을 만들기 리더를 위한 종합지 ‘마을독본’을 창간했다.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에서 이름을 딴 ‘마을독본’은 농촌 마을 만들기 리더와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용 잡지다.

특히 이번 창간호의 특집 주제는 ‘마을자치규약’으로, 농촌 마을 자치규약에 대한 주요 쟁점과 제안, 사례와 당진시의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쟁점토론 결과, 지역 센터와 마을 소개, 마을 활동가의 경험담 등 농촌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제대로 된 규약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마을독본 창간호 발행이 농촌 마을의 자치규약 정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구 센터장은 “마을독본은 앞으로도 농촌 마을 현실에 필요한 다양한 특집 주제를 연이어 다룰 계획”이라며 “마을 만들기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17년 9월과 12월에 창간준

비 1, 2호를 발행했으며, ‘마을의 주민조직’과 ‘마을의 공동재산 관리’를 특집 주제로 다룬 바 있다. 마을독본은 계간지로, 2018년 모두 4차례 발간할 계획이다.

마을독본 구독을 희망할 경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041-429-0007), 또는 도서출판 월간토마토(042-320-7151)로 문의할 수 있다.



연구원 소식

2018 SUMMER Vol.83

3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소상공인 상기업소 수 전국 20.0%, 충남 28.2% 증가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기업소 수는 총112,413개로 2015년 8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기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기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0,999개) 증가한 2,40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기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5,442개), 제주도 제주시(30,322개), 인천시 남동구(2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기업소는 모두 11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기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1,613개), 아산시(1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기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기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기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사계 - 여름

